

# 경제동향 & 이슈

2018년 5월호 통권 67호



## CONTENTS

- I. 경제동향
- II. 최근 일본경제의 특징 분석
- III. 가계·기업소득간 성장 불균형 원인 분석 및 시사점



naboo Economic Trends & Issues  
**경제동향 & 이슈**

2018년 5월호 통권 제6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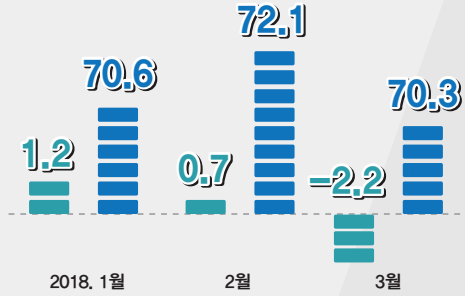
## Contents

---

I. 경제동향	4
II. 최근 일본경제의 특징 분석	31
III. 가계·기업소득간 성장 불균형 원인 분석 및 시사점	49

## 제조업 생산과 평균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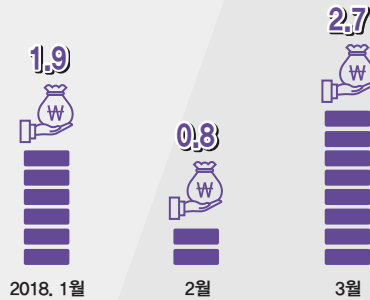
■ 제조업생산증가율 (단위: 전월비, %)  
■ 제조업평균가동률 (단위: %)



제조업 생산이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09년 3월 이후 최저수준

## 소매판매액

(단위: 전월비, %)



소비는 3개월 연속 증가하며 개선세

## 소비자물가

(단위: 전년동월대비, %)



농수산물과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3%p 상승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연락처  
788-3775

## 경제동향

### 최근 우리경제는 제조업생산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이나 소비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등 완만한 경기회복세는 유지

- 제조업생산은 3월 중 자동차, 조선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제조업평균가동률은 2009년 3월 (69.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제조업생산증가율(전월비, %): (18.1월)1.2→(2월)0.7→(3월)-2.2
  - 제조업평균가동률(%): (18.1월)70.6→(2월)72.1→(3월)70.3
-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액이 전월비 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설비투자도 기계류 투자가 큰 폭 줄어들면서 감소 전환
  - 건설기성액(전월비, %): (18.1월)7.3→(2월)-4.9→(3월)-4.5
  - 설비투자지수(전월비, %): (18.1월)5.4→(2월)1.1→(3월)-7.8
- 수출은 4월 중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이는 전년동월 선박수출 급증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수출호조는 유효
  - 수출증가율(전년동월비, %): (18.1월)22.3→(2월)3.3→(3월)6.1→(4월)-1.5

### 소비자물가는 농수산물과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4월 중 소비자물가는 쌀, 감자, 오징어, 석유류, 가공식품 등 일부 농수산물과 공업제품 가격 상승으로 전월 (1.3%)보다 높은 전년동월대비 1.6%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18.2월)1.4→(3월)1.3→(4월)1.6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전월과 동일한 전년동월대비 1.4% 상승
  -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18.2월)1.3→(3월)1.4→(4월)1.4

### 원/달러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전월보다 하락하였으며, 국고채금리 또한 전월보다 하락

- 원/달러 환율은 4.27일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전월보다 4.1원 낮은 1,067.8원을 기록
-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월평균으로 전월(2.27%)보다 8bp 낮은 2.19%를 기록
  - 국고채금리는 월초반에는 미중간 무역분쟁 우려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강화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월중반 이후로는 미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한 영향으로 오름세를 나타냄

[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2Q	3Q	4Q	1Q	2월	3월	4월
전산업생산	3.0	2.3	2.5 (-0.2)	3.9 (0.9)	-0.7 (-0.2)	0.6 (0.2)	-1.2 (-0.2)	-1.0 (-1.2)	-
광공업생산	2.3	1.9	2.2 (-1.0)	4.6 (0.8)	-3.8 (-0.9)	-2.4 (-1.3)	-6.8 (0.8)	-4.3 (-2.5)	-
서비스업생산	2.6	1.9	1.7 (0.5)	2.5 (0.9)	0.9 (0.2)	2.6 (1.0)	1.9 (-0.2)	2.3 (0.4)	-
소매판매액	3.9	1.9	1.0 (1.0)	3.2 (0.2)	2.1 (0.9)	5.0 (3.1)	6.6 (0.8)	7.0 (2.7)	-
설비투자지수	-1.3	14.1	17.8 (3.1)	20.6 (0.2)	2.0 (-1.7)	9.2 (8.3)	9.4 (1.1)	-0.2 (-7.8)	-
건설기성액(불변)	15.4	10.1	13.6 (-0.2)	12.7 (-0.3)	-0.5 (-0.1)	1.4 (2.3)	-1.2 (-4.9)	-6.3 (-4.5)	-
수출(통관)	-5.9	15.8	16.7	24.0	8.4	10.1	3.3	6.1	-1.5
수입(통관)	-6.9	17.8	18.6	17.9	11.6	13.5	15.2	5.2	14.5
경상수지(억달러)	992	785	165	256	172	118	39.6	51.8	-
실업률	3.7	3.7	3.8	3.4	3.2	4.3	4.6	4.5	-
취업자수(천명)	231	316	367	279	265	183	104	112	-
소비자물가	1.0	1.9	1.9	2.3	1.5	1.3	1.4	1.3	1.6
원/달러환율	1,160	1,130	1,130	1,132	1,105	1,072	1,081	1,072	1,068
국고채금리(3년)	1.44	1.80	1.68	1.77	2.10	2.24	2.28	2.27	2.19

주: 1) (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 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기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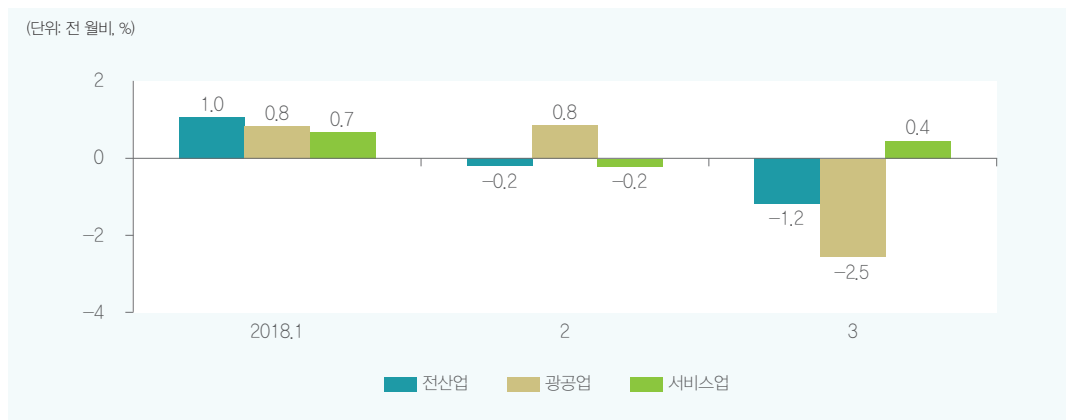
# 01. 경제동향

##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생산이 증가하였으나 광공업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

### ■ 3월 중 전산업생산은 전월비 1.2% 감소

- 광공업생산은 완성차 및 부품 생산이 감소한 자동차와 조선 등 전방수요산업의 부진으로 기계장비 생산이 큰 폭 감소하는 등 전월비 2.5% 감소(전년동월대비 -4.3%)
  - \* 자동차 생산(전월비, %): ('18.1월)12.1→(2월)4.9→(3월)-3.7
  - \* 기계장비 생산(전월비, %): ('18.1월)3.6→(2월)0.4→(3월)-4.3
- 서비스업생산은 금융·보험(-1.8%)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야외활동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숙박·음식점(4.8%)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전월비 0.4% 증가(전년동월대비 2.3% 증가)

[그림 1]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 ■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제조업생산 부진으로 2009년 3월(69.9%)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70.3%를 기록

- 제조업평균가동률(%): ('18.1월)70.6→(2월)72.1→(3월)70.3

### ■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의 경우 재고는 전월비 1.2% 증가하고 출하는 1.4% 감소하면서 전월 보다 2.9%p 상승한 114.2%를 시현

- 재고/출하 비율(%): ('18.1월)110.0→(2월)111.3→(3월)114.2

[그림 2] 제조업평균가동률 추이



자료: 통계청

■ 3월 중 경기관련 지표의 움직임은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냄

-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하였으나,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과 동일(99.8)한 수준
-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장단기금리차, 구인구직비율 등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입물가비율, 건설수주액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2p 하락(100.4)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판매 증대로 개선세를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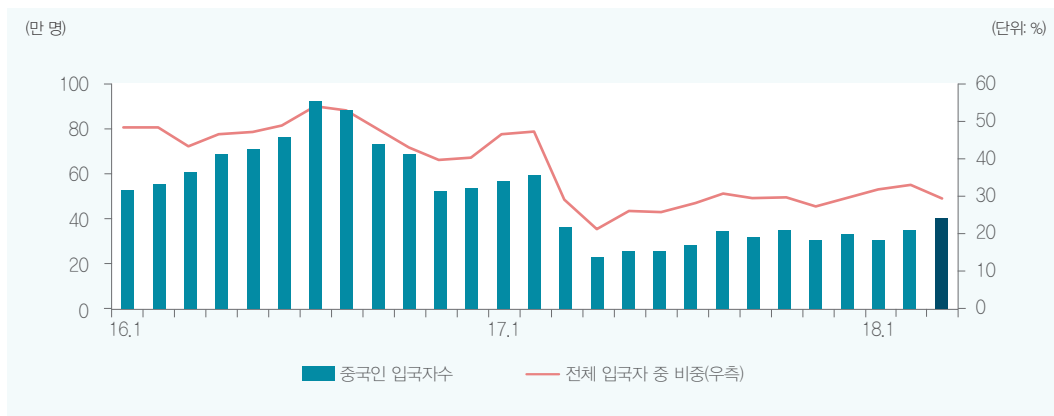
■ 3월 중 소매판매는 전월비 2.7% 증가하며 1월(1.9%)과 2월(0.8%)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비, %): ('18.1월)1.9→(2월)0.8→(3월)2.7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는 7.0% 증가하여 2월(6.6%) 보다 증가세 확대

- 작년 3월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이 줄면서 화장품 등이 큰 폭(전월비 -9.3%)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작용
- 2018년 3월 중 중국인 입국자수는 지난해 단체관광 금지조치의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11.8% 증가
- 중국인 입국자수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18.1월)-46.0→(2월)-41.5→(3월)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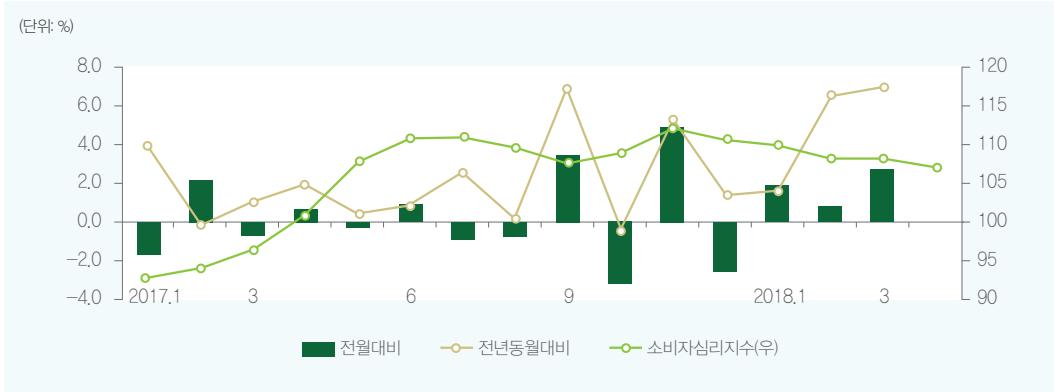
[그림 3] 중국인 입국자수 추이



자료: 한국관광공사

- 내구재 판매는 자동차 및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에 힘입어 승용차판매와 통신기기 판매가 전월대비 각각 8.1%, 10.8% 늘면서 전월비 6.6% 증가
- 준내구재 판매는 의복판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신발 및 가방 판매도 증가로 전환되면서 전월비 5.5% 증가
  - 의복판매 증가율(전월비, %): (18.1월)-9.1→(2월)9.5→(3월)5.9
  - 신발 및 가방판매 증가율(전월비, %): (18.1월)15.1→(2월)-0.9→(3월)3.3
- 비내구재 판매는 화장품 판매가 큰 폭(전월비 13.0%) 증가하였으나, 음식료품(-2.0%), 차량연료(-1.6%) 등이 감소하며 전월비 -0.3%를 시현
- 4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107.1을 기록하여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는 있으나, 5개월 연속 하락세
  - 국내 2~3월 중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원화강세와 보호무역기조 강화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요인 등이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소비자심리지수: (18.1월)109.9→(2월)108.2→(3월)108.1→(4월)107.1

[그림 4] 소매판매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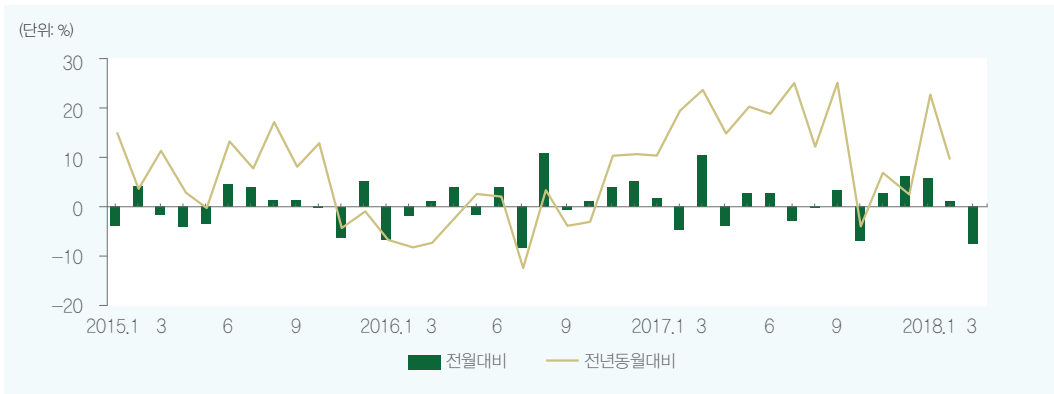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 감소폭이 확대되며 부진

### ■ 3월 중 설비투자지수(전월비)는 기계류 투자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의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감소로 전환

- 설비투자지수(전월비, %): ('18.1월)5.4→(2월)1.1→(3월)-7.8
- 기계류(전월비, %): ('18.1월)6.9→(2월)-4.8→(3월)-11.6
- 운송장비(전월비, %): ('18.1월)0.3→(2월)21.9→(3월)3.5
- 전년동월대비로는 운송장비(9.4%)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기계류(-3.6%) 투자가 줄어 0.2% 감소

[그림 5] 설비투자지수증가를 추이



자료: 통계청

■ 특히 ICT<sup>1)</sup>설비투자자는 반도체부문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정보통신분야의 설비투자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2개월 연속 감소

- ICT설비투자자지수(전월비, %): (18.1월)11.4→(2월)-11.9→(3월)-8.6

■ 기계류수입액은 반도체제조용장비를 중심으로 증가세 둔화

-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전년동월대비, %):(18.1월)112.5→(2월)103.0→(3월)25.8

- 기계류수입액(전년동월대비, %):(18.1월)30.3→(2월)23.8→(3월)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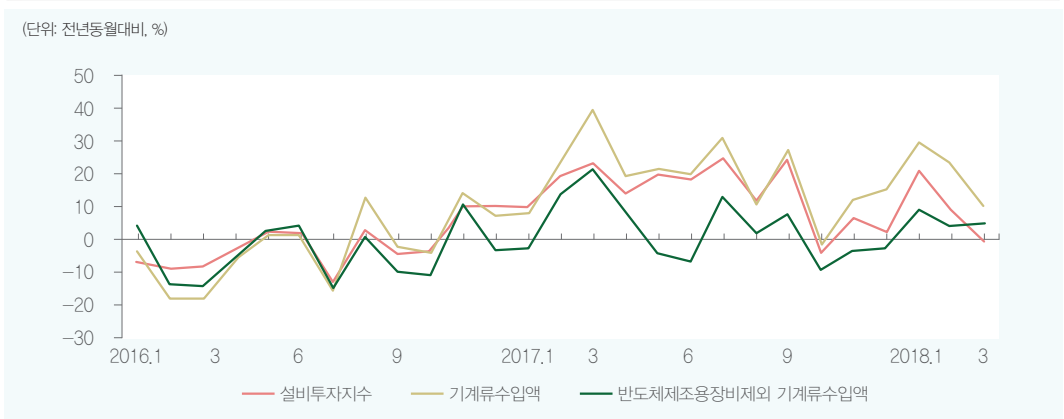
- 전체 기계류수입액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제조용장비를 제외한 기계류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하여 전월(4.6%)에 비해 소폭 확대

[그림 6] ICT설비투자자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7] 기계류수입액(전체와 반도체제조용장비 제외)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무역협회

1) ICT: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부문

■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에 비해 감소세가 확대되었고, 국내기계수주는 민간 비제조업(11.8%)에서 호전되면서 증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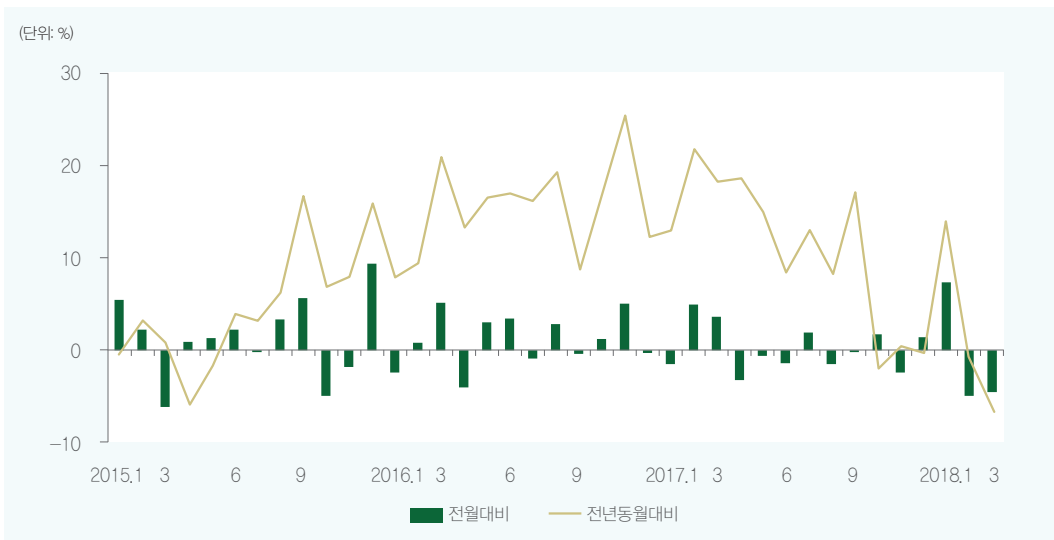
- 기계류 내수출하(전월비, %): (‘18.1월)6.0→(2월)-1.6→(3월)-7.0
- 국내기계수주(전월비, %): (‘18.1월)-7.2→(2월)-5.2→(3월)0.6

건설투자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을 보이며 전월의 감소세 지속

■ 3월 중 건설기성액(불변)은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부진을 보이며 전월비 4.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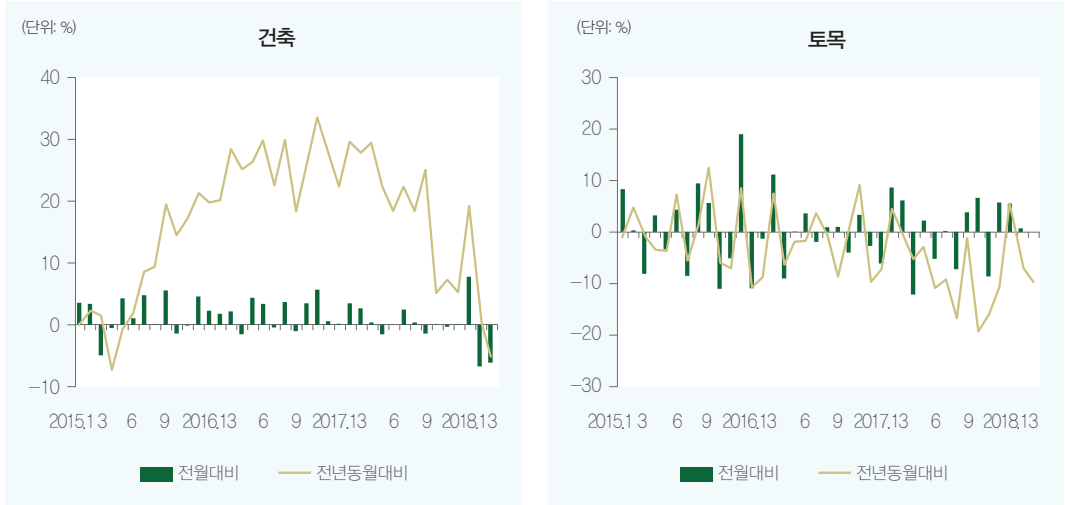
- 건설기성액(전월비, %): (‘18.1월)7.3→(2월)-4.9→(3월)-4.5
- 건축(전월비, %): (‘18.1월)7.8→(2월)-6.7→(3월)-6.1
- 토목(전월비, %): (‘18.1월)5.5→(2월)0.7→(3월)0.0
- 전년동월대비로는 토목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건축이 감소로 전환되며 전월(-1.2%)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6.3%를 기록

[그림 8] 건설기성액(불변)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9] 공종별 건설기성액(불변)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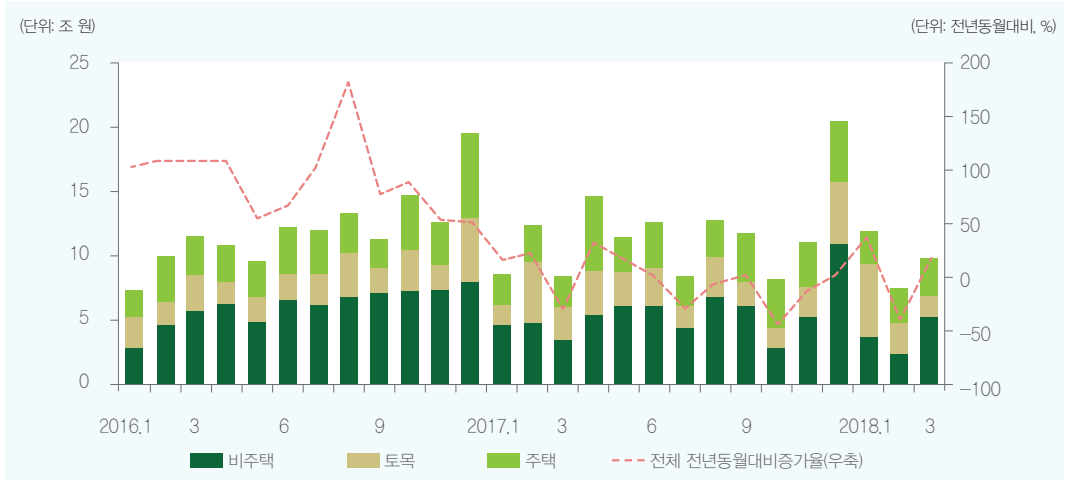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건설수주액(경상)은 토목과 관공서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주택, 공장 및 창고 등에서 증가하며 전년 동월대비 15.5% 증가

- 건설수주액(전년동월대비, %): (18.1월)39.4→(2월)-35.7→(3월)15.5
- 공종별수주액을 보면 전체 9.7조원 중 주택(5.2조원), 비주택(2.9조원), 토목(1.6조원)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각각 49.6%, 25.6%, -38.4%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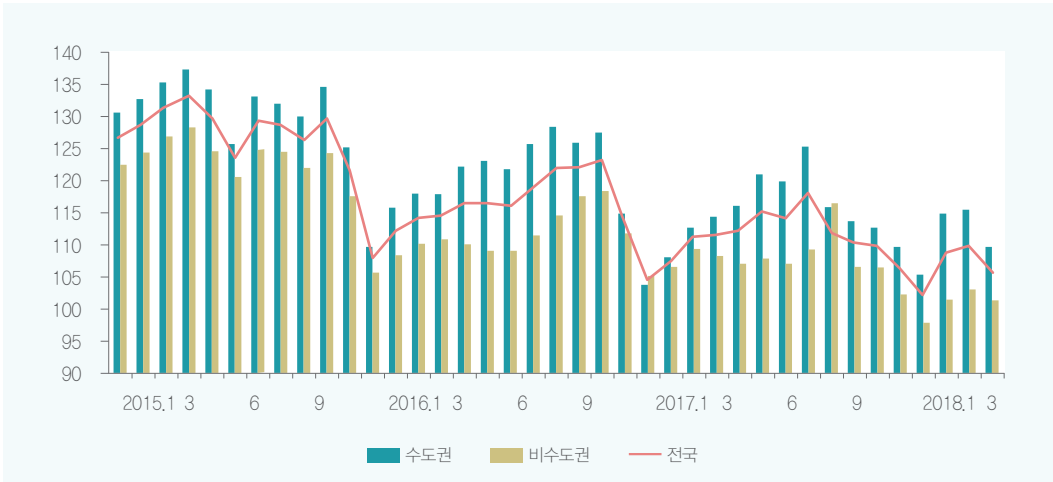
[그림 10] 공종별 건설수주액(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 부동산시장안정화 대책(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1월), 신DTI 시행(2월), DSR 도입(3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4월), 보유세 인상 논의)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향후 주택투자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그림 11]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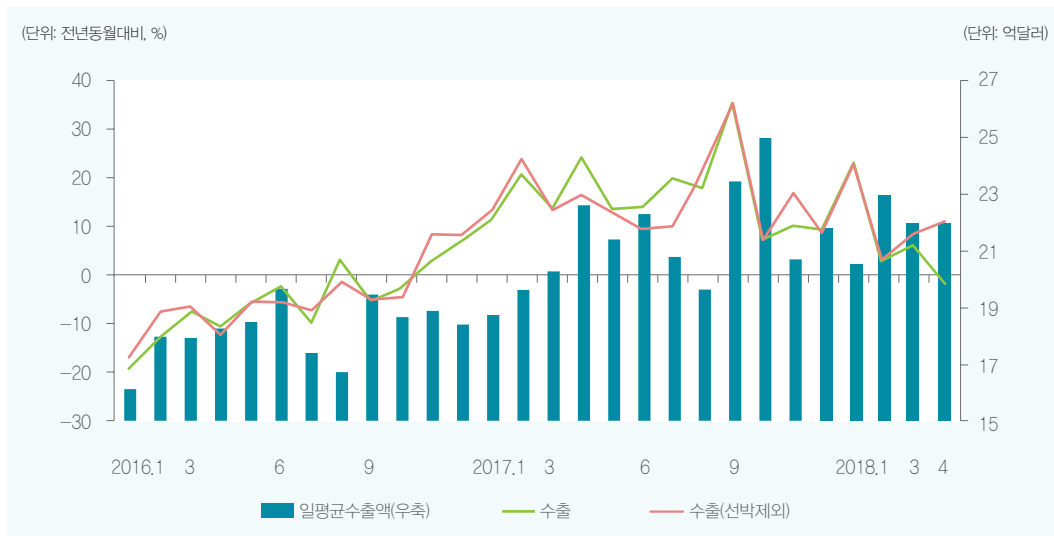


주: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 범위의 값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  
 자료: 국토연구원

## 수출은 선박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016년 10월 이후 18개월만에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이 감소

- 4월 중 수출은 500.6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
  - 월별 수출금액은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작년 4월 중 선박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전체 수출증가율은 감소를 기록
    - \* 선박수출(전년동월대비, %): (17.4월)102.7→(18.4월)-75.0
  - 다만 선박을 제외한 수출 실적은 전년동월대비 10.4% 증가하여 여전히 견조한 모습
    - \* 선박제외 수출증가률(전년동월대비, %): (18.2월)2.1→(3월)8.4→(4월)10.4
- 통관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21.8억달러로 양호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3.7%)은 2016.11월 이후 처음 감소
  - 일평균 수출금액(억달러): (18.2월)22.9→(3월)22.0→(4월)21.8
  - 일평균 수출증가률(전년동월대비, %): (18.2월)16.6→(3월)8.3→(4월)-3.7

[그림 12] 수출증가율과 일평균수출액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수출금액을 단가와 물량 요인으로 구분해보면 물량은 3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단가는 감소

- 수출물량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18.2월)-2.6→(3월)-9.6→(4월)9.5
- 수출단가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18.2월)6.1→(3월)17.4→(4월)-10.1

■ 원화표시 수출증가율은 달러표시 수출감소와 원화강세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7.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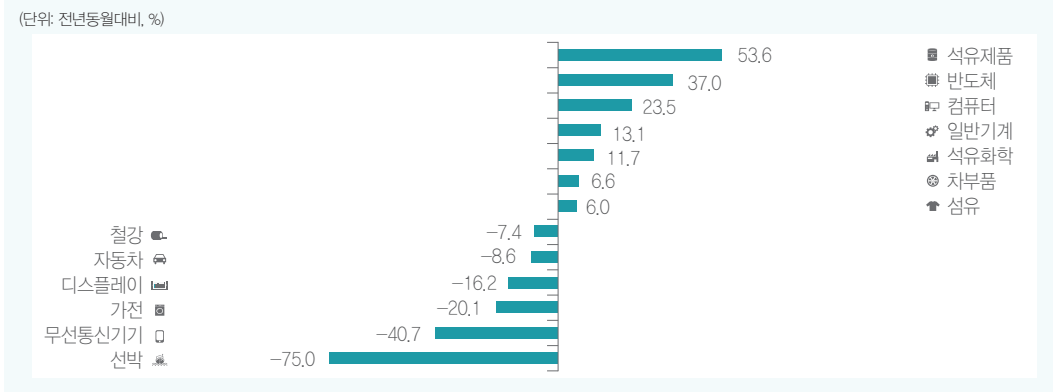
- 원화표시 수출증가율(전년동월대비, %): (18.2월)-2.6→(3월)0.2→(4월)-7.2
- 원/달러 환율(원): (17.4월)1,132.7→(18.4월)1,067.8

■ 13대 주력품목 중 석유제품, 반도체, 컴퓨터, 일반기계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6개 품목은 감소

- 석유제품은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상승과 지난해 동월 정기보수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3.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 국제유가(두바이유, 달러/배럴): (17.4월)52.3→(18.4월)68.3
-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수요가 늘어남에 등 월별 역대 2위 수출실적을 기록(97.8억 달러)하며 전년동월대비 37.0% 증가
  - \* 반도체수출액(억달러): (18.2월)90.0→(3월)108.0→(4월)97.8
- 컴퓨터는 기업용 데이터 센터의 고용량·고성능 보조기억장치(SSD) 수요 증가와 PC부품 교체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
  - \* SSD 글로벌 수요전망(억달러, IHS): (17)158.3→(18)167.0→(19)171.3

- 일반기계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설비투자 증가와 건설경기 호황 등으로 공작기계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3.1% 증가
- 반면 수출경쟁력 약화와 해외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었고 선박의 경우 선박수주잔량 감소와 전년동월 일시적인 대규모 해양플랜트 수출급증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며 전년동월대비 75.0% 감소

[그림 13] 13대 주력품목별 수출증가율 추이(2018.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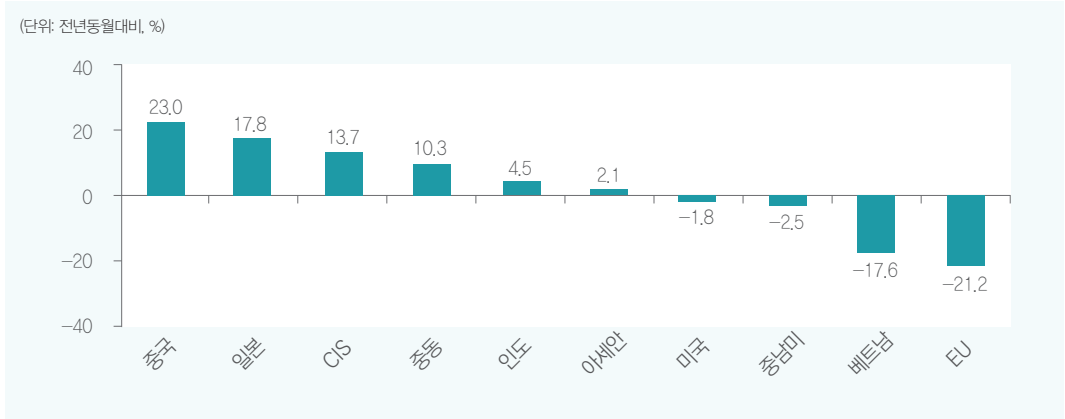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별로는 대중국, 아세안 등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대EU,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

- 대중국 수출은 4차산업혁명 관련 수요확대와 제조업 경기호조 등으로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이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23.0% 증가
- 대일본 수출은 일본 경기회복세 지속, 석유제품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현지 생산 감소 등으로 일반기계와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7.8% 증가
- 반면 대EU 수출은 전년동월 해양플랜트 수출급증(영국)에 따른 기저효과로 선박 수출이 크게 줄어들어 전년동월대비 21.2% 감소
- 대베트남 수출은 우리 기업들의 대베트남 제조업 투자 감소세, 부품 현지 조달 확대, 경쟁 심화 등으로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7.6% 감소

[그림 14]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추이(2018,4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4월 중 수입은 434.5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5% 증가

- 품목별로는 중간재가 전년동월대비 2.8% 감소했으나 원유, 반도체 제조용장비, 액화천연가스 등 1차산품(11.3%), 소비재(8.4%), 자본재(0.5%) 수입은 모두 증가

■ 무역수지는 4월 중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감소로 전환하고 수입은 높은 증가율을 지속함에 따라 흑자 규모가 전년동월(129억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된 66억 달러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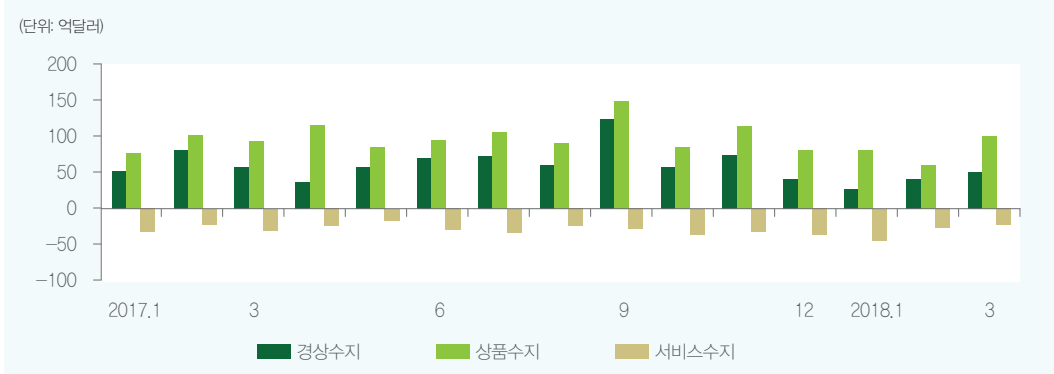
- 무역수지 흑자(억달러): ('17.4월)129→('18.3월)68→(4월)66

경상수지는 본원소득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는 등 전년동월에 비해 흑자규모가 축소

■ 3월 경상수지는 전년동월(57.2억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축소된 51.8억달러를 나타냄

- 상품수지는 전년동월(93.6억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확대되며 98.8억달러를 기록
-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6.1→-3.9억달러), 여행수지(-13.5→-13.1억달러)가 개선되면서 전년동월(-31.1억달러)보다 적자규모가 축소된 -22.5억달러를 시현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지급(-7.7→-19.8억달러) 증대로 전년동월(-5.2억달러)보다 적자규모가 확대된 -15.8억달러를 기록
- 이전소득수지는 8.7억달러 적자를 시현

[그림 15] 경상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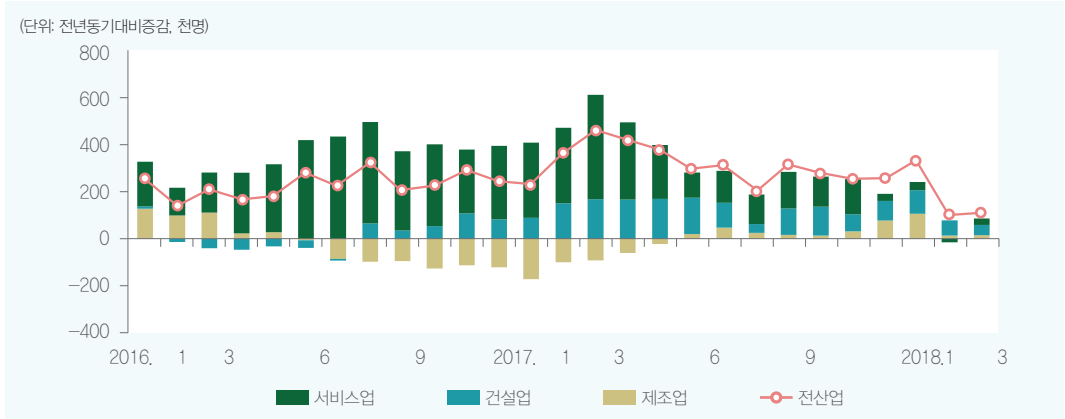
## 고용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증가세 둔화와 서비스업 부진 지속 등으로 전월에 이어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

- 3월 중 전체 취업자수(2,655.5만명)는 서비스업에서 부진이 전월에 이어 지속되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증가폭이 둔화되며 전년동월대비 11.2만명(0.4%) 증가

  -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비농림어업 8.7(제조업 1.5, 건설업 4.4, 서비스업 2.7), 농림어업 2.5
  - 비농림어업의 취업자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18.1월)24.1→(2월)6.3→(3월)8.7
-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8.8만명, 4.6%), 공공행정(5.9만명, 6.3%),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4.4만명, 10.5%)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9.6만, -2.5%), 교육서비스업(-7.7만명, -4.0%), 부동산업(-3.0만명, -5.7%) 등에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7만명 증가에 그침

  -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18.1월)3.5→(2월)-1.5→(3월)2.7
- 제조업 취업자수는 지난 1월 10.6만명까지 확대되었으나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만명대로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건설업은 전월(6.4만명, 3.4%)에 비해 둔화된 4.4만명(2.3%) 증가
-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년동월대비로 2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6년 4월(17.2만명)과 5월(18.2만명) 이후 처음으로 현재의 추세라면 금년 고용증가폭이 30만명대를 기록하기 어려울 전망

[그림 16]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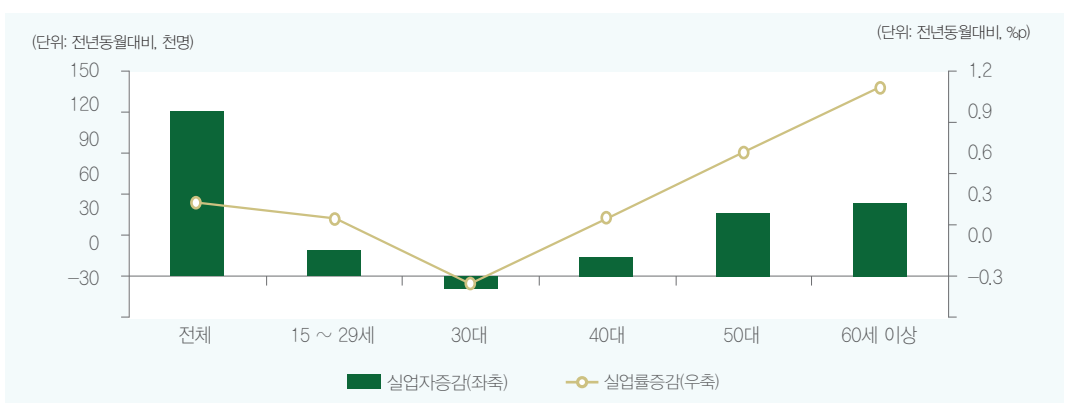


주: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건설업 취업자수를 제한 것으로 계산  
 자료: 통계청

■ 고용률(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20대, 30대, 60세이상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으나, 40대와 50대에서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하락

- 3월 고용률은 60.2%(15~64세 OECD비교기준은 66.1%)로 전년대비 0.1%p(OECD비교기준 전년과 동일) 하락
- 연령층별 취업자수는 청년층(15~29세)에서 전년동월대비 0.4만명, 50대에서 2.1만명, 60세이상에서 22.1만명 증가하였으나, 30대에서 3.8만명, 40대에서 9.7만명 감소

[그림 17] 연령층별 실업률 및 실업자수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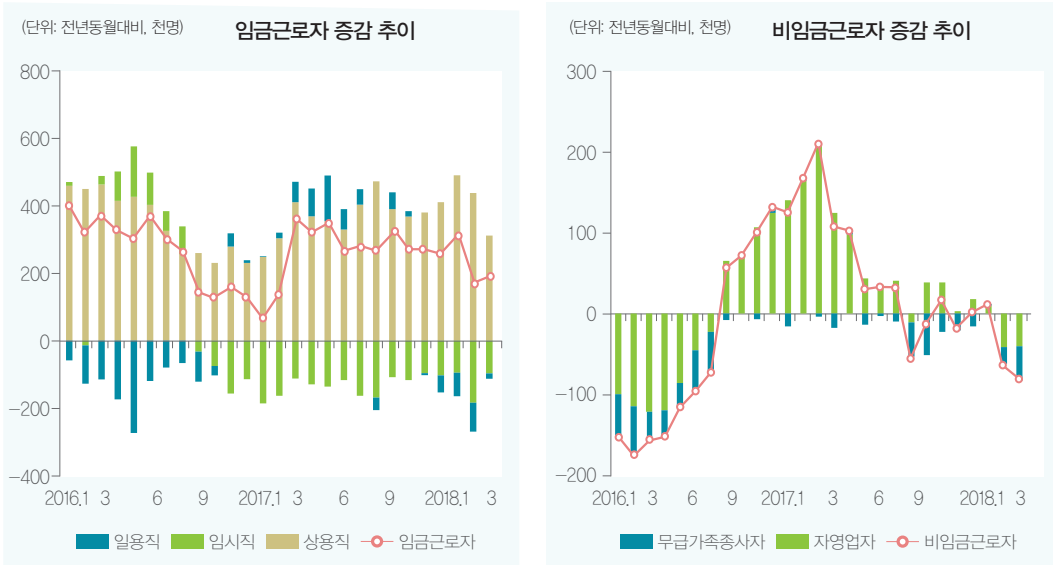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4.5%(계절조정 4.0%)로 전년동월(4.1%, 계절조정 3.6%)에 비해 0.4%p 상승**

- 3월 실업률은 4.5%로 연령층별로는 30대(3.7%, -0.1%p)를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청년층 11.6%로 0.3%p, 40대 2.8%로 0.3%p, 50대 2.8%로 0.7%p, 60세이상 3.8%로 1.1%p 각각 상승)
- 실업자는 125.7만명(청년층 50.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0만명 증가(청년층 1.8만명, 40대 1.3만명, 50대 4.6만명, 60세이상 5.3만명 증가)

■ **중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sup>2)</sup>는 일용직과 임시직의 고용감소폭이 전월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상용직의 증가폭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비임금근로자<sup>3)</sup>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전월에 이어 감소**

- 3월 임금근로자(1,991,0만명)는 전년동월대비 19.6만명(1.0%) 증가하였고, 그 중 상용직은 30.8만명(2.3%) 증가하였으나,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9.6만명(-1.9%), 1.6만명(-1.1%) 감소하면서 전월(임시직 - 18.2만명, 일용직 - 8.5만명)에 비해 감소폭 축소
- 비임금근로자(664.4만명)는 전월(-6.3만명, -1.0%)에 이어 감소폭이 확대되며 8.4만명(-1.3%) 감소하였고, 그 중 자영업자는 4.1만명(-0.7%), 무급가족종사자는 4.3만명(-4.1%) 각각 감소

[그림 18]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취업자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2) 임금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임시직, 1개월 미만 또는 매일 고용되어 일급,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일용직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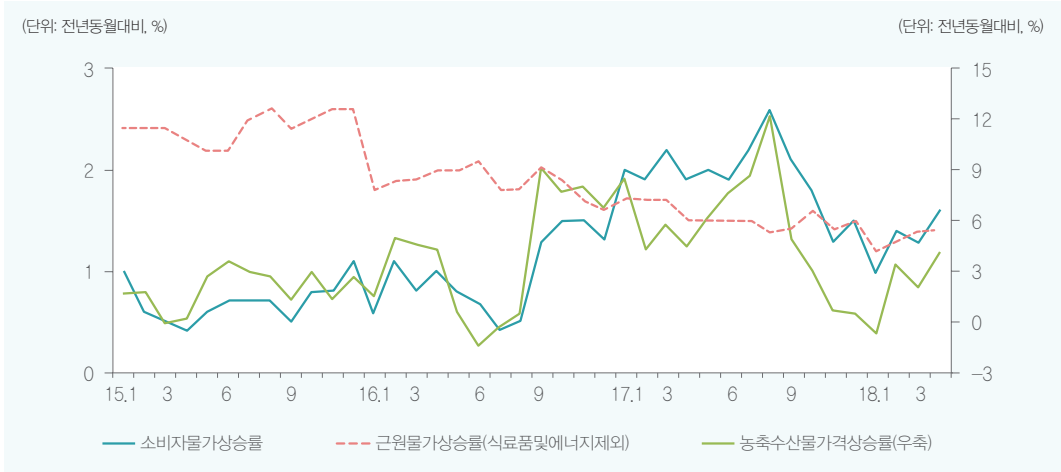
3)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에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

## 소비자물가는 농수산물과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임

### ■ 4월 중 소비자물가는 농수산물과 공업제품의 가격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월(1.3%)보다 높은 전년동월 대비 1.6% 상승

- 농축수산물가격은 축산물이 -4.7% 하락하였으나, 농산물과 수산물이 쌀(30.2%), 감자(76.2%), 오징어(29.1%) 등을 중심으로 각각 4.1%, 5.0% 상승하는 등 전월(2.1%)보다 높은 4.1% 상승
- 공업제품가격은 석유류(3.2%→3.8%), 가공식품(0.7%→1.4%), 기타공업제품(-0.2%→1.5%) 등이 오름세를 보이며 전월(0.9%)보다 높은 1.4% 상승
- 서비스가격은 개인서비스(2.5%)가 전월 수준을 보였으나, 집세(0.8%)와 공공서비스(0.3%) 등에서 하락하며 전월(1.7%)보다 낮은 1.6% 상승

[그림 19]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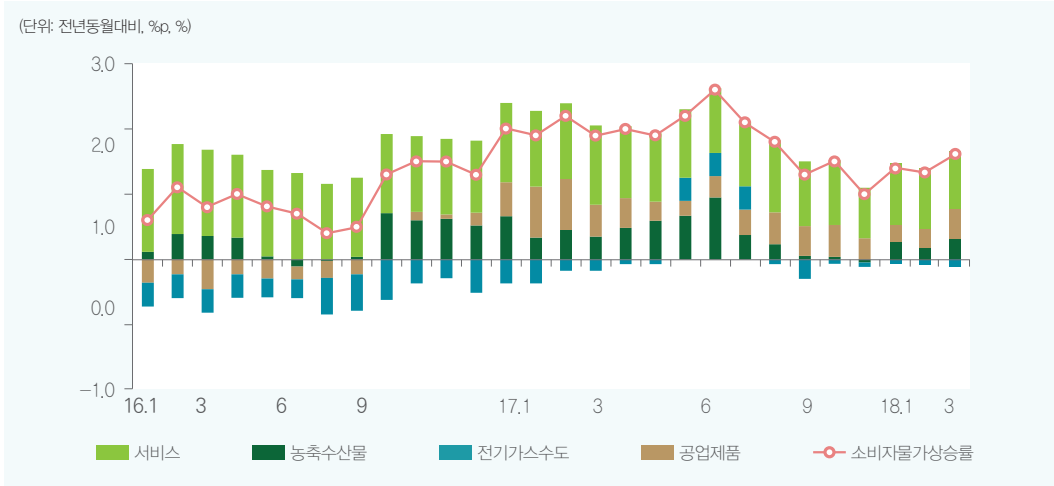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 근원물가(식료품및에너지제외)는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하여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안정된 모습

- 근원물가는 금년 1월 1.2%까지 하락하였으나 2월 1.3%, 3~4월 중 1.4%를 기록하며 완만히 상승하는 모습
- 근원물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p): (‘18.2월)1.01→(3월)1.09→(4월)1.09
- 농축수산물가격의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p): (‘18.2월)0.27→(3월)0.16→(4월)0.32
-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완만하나마 상승하는 모습
- 기대인플레이션율(전년동기대비, %): (‘17.4/4)2.5→(‘18.1/4)2.6→(4월)2.6

[그림 20]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추이



## 국고채금리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약화되고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한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임

- 4월 중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월초반 미중간 무역분쟁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2.10% 까지 하락하였으나, 월중반 이후 안전자산 선호 약화, 물가상승 우려에 따른 미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지속하며 2.24%까지 상승

  - 3월 중 미중간 무역분쟁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으나, 4월 들어 협상을 통한 타결 기대가 높아지고, 북한과 시리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
- 미국 국채금리(10년 만기)는 4월 들어 유가상승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트럼프정부의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3.00%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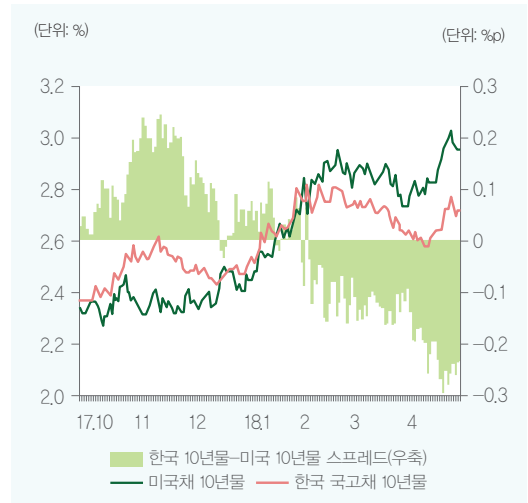
  - 국제유가는 OECD 석유재고가 감소한 가운데 미국의 이란 제재, 예멘 반군의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4월 중 배럴당 70달러까지 상승
  -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가 강화
  - 트럼프 정부의 재정확대로 단기채 위주의 국채발행량이 늘어난 점도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
-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국고채(10년물)와 미국채(10년물)간 스프레드는 30bp 까지 확대되며 한미 기준금리 역전 이후 격차가 확대

[그림 21] 미국채 10년물 금리 및 WTI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2] 미국채 및 한국 국고채 10년물 추이



자료: Bloomberg

## 원/달러 환율은 미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환율 보고서 결과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소폭 하락

- 4월 중 원/달러 환율은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 내용,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의 영향으로 전월 보다 4.1원(0.4%) 하락하며 1,067.8원을 기록
  - 원/달러 환율(원): (18.2월)1,079.6→(3월)1,071.9→(4월)1,067.8
  - 원/달러 환율은 미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로 인한 금리차 확대 등과 같은 달러 강세요인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적자 축소 압력 등과 같은 약세 요인이 혼재되면서 소폭 하락

[그림 23] 월별 원/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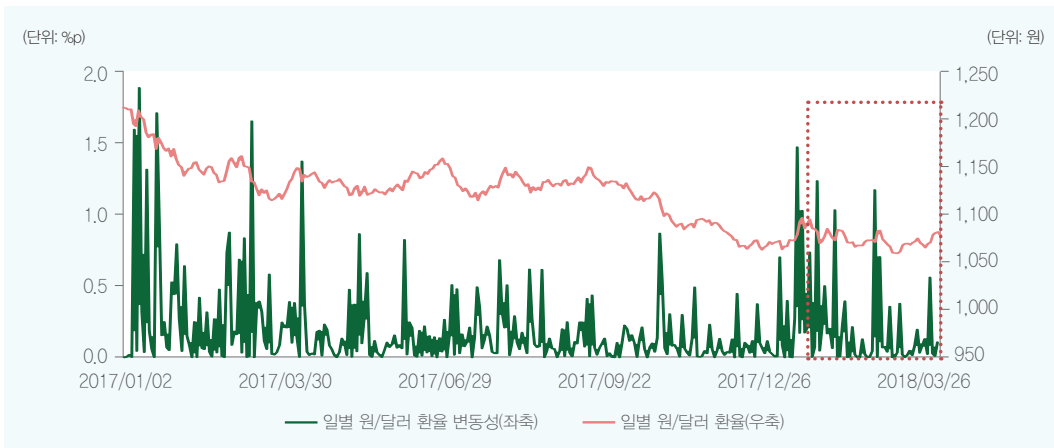


주: 월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일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달러화 강세 및 약세 요인이 혼재되면서 박스권에서 소폭의 등락을 유지

- 4.14일 발표된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내용, 4.27일 남북정상회담 결과, 5월 미 기준금리 동결 예상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되고 당분간 완만한 하향 흐름이 유지될 전망
- 원/달러 환율의 일별 변동폭은 금년 2월에는 일평균 0.49%까지 확대되었으나, 4월에는 0.25%로 감소
- 일별 원/달러 환율 변동폭(일평균, 전일대비, %): (18.1월)0.27→(2월)0.49→(3월)0.30→(4월)0.25

[그림 24] 일별 원/달러 환율 및 변동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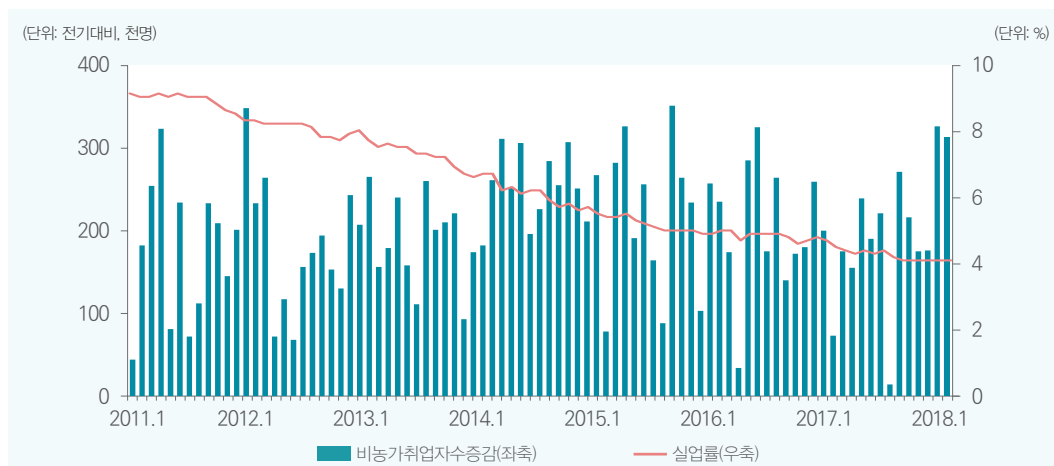
주: 일평균 자료 기준이며, 일별 변동성은 전일대비 변동률의 제곱으로 계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02. 해외경제

### 미국경제는 일시적 요인에 의해 1/4분기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세계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이 재개될 전망

- 2018년 1/4분기 미국의 실질GDP성장률(전기비 연율, 속보치)은 2.3%로 전분기(2.9%)보다 둔화
  - GDP성장률(전기비 연율, %): (‘17.3/4)3.2→(4/4)2.9→(‘18.1/4)2.3
  - 개인소비자 개인소득세 환급지연 등으로 전분기(4.0%)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1.1%)
  - 그러나 민간투자(4.7%→7.3%), 순수출(-1.2%→0.2%) 등이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여 향후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개인소비지출은 3월 중 전월의 감소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제조업생산은 증가세 유지
  -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비 연율, %): (‘18.1월)-1.8→(2월)-1.8→(3월)5.1
  - 제조업생산(전월비, %): (‘18.1월)-0.4→(2월)1.5→(3월)0.1
  
- 비농가취업자수는 3월 중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실업률은 6개월 연속 4.1%의 낮은 수준을 유지
  - 비농가취업자수 증감(전월대비, 만명): (‘18.1월)17.6→(2월)32.6→(3월)10.3

[그림 25] 비농가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추이



자료: FRB St. Louis Database

■ 소비자물가는 3월 중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하여 전월(2.3%)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근원 PCE물가상승률<sup>4)</sup>은 미 연준 목표치(2.0%)에 근접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18.1월)2.1→(2월)2.3→(3월)2.4
- 근원PCE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18.1월)1.5→(2월)1.6→(3월)1.9

■ 시장금리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2월 말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후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4월 들어 다시 상승하는 모습

- 미국채금리(10년물, %): (18.1월)2.6→(2월)2.9→(3월)2.8→(4월)2.9
- 최근 들어 일별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4.24일 이후 3%를 상회하자 미 달러화 강세기조 전환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과 환율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제기

**유로지역 경제는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둔화되고 체감지표도 4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개선세가 둔화**

■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2월 중 전년동월대비 2.9%로 전월(3.7%) 보다 증가세가 둔화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17.12월)5.2→(18.1월)3.7→(2월)2.9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월 중 음식료품 가격상승과 부활절 연휴로 인한 서비스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3%를 나타내어 전월(1.1%) 보다 높아짐

- 근원물가는 전월과 동일한 전년동월대비 1.0% 상승

■ 실업률은 2월 중 전월보다 0.1%p 하락한 8.5%를 나타내었으며 청년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17.7%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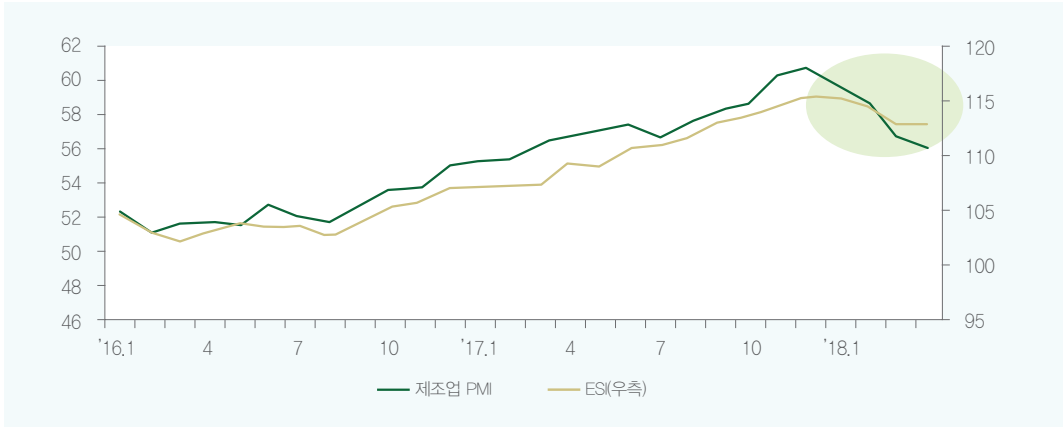
- 유로지역 국가별 실업률(2018년 2월기준, %): 독일(3.5), 프랑스(8.9), 이탈리아(10.9), 스페인(16.1)
- 청년실업률(%): (17.7월)18.8→(10월)18.4→(12월)17.9→(18.2월)17.7

■ 유로지역 구매관리자지수(PMI)와 경기체감지수(ESI)는 4월 중 각각 56.0, 112.7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하락

- 제조업(PMI): (18.1월)59.6→(2월)58.6→(3월)56.6→(4월)56.0
- 경기체감지수(ESI): (18.1월)115.1→(2월)114.4→(3월)112.7→(4월)112.7

4)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이 미 국민의 전월 소비를 조사하여 매월 말 발표하는 물가지수임. PCE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그림 26] 유로지역 제조업PMI와 ESI 추이



자료: Bloomberg, European Commission

[BOX] 유럽지역 고용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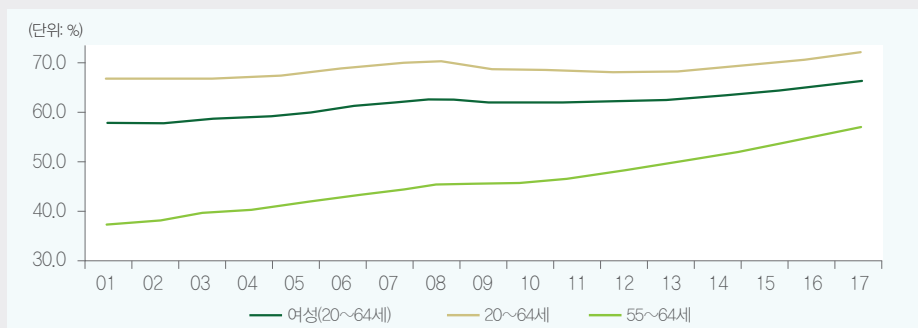
2017년 유럽지역 20~64세 고용률은 72.2%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고용증가는 주로 여성과 고령층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2017년 여성 고용률은 66.5%, 55~64세 고령층 고용률은 57.1%를 기록

- 여성고용률(%): ('01)57.9→('05)60.0→('10)62.1→('15)64.3→('17)66.5

- 고령층고용률(%): ('01)37.7→('05)42.2→('10)46.2→('15)53.3→('17)57.1

[EU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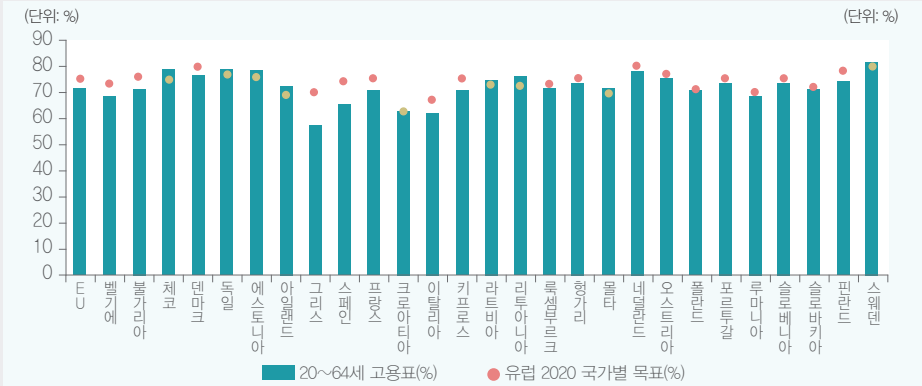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 EU국가들은 2020년까지 20~64세 고용률을 75% 이상으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

- EU집행위는 2010년 유럽의 신경제 전략인 'Europe 2020 Strategy'를 발표하여 유럽공동체 차원의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
- 5대 목표중 첫 번째로 20~64세 고용률을 2010년 69%에서 2020년 75%로 제고하고자 함
  - 여성, 고령근로자, 이민자의 노동참여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사회적·지역적 통합을 이루면서 포용적 성장을 이루고자 함
- 이를 위해 국가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현재 9개국만 2020년까지 목표인 고용률을 달성

[EU 국가별 고용률과 유럽 2020 국가별 목표]



주: ●은 '유럽 2020'의 고용률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국가  
 자료: Eurostat

## 일본경제는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소매판매가 감소로 경기판단지수가 기준선(50)을 하회

- 광공업생산은 3월 중 전월대비 1.2% 증가하여 전월(2.0%)에 이어 증가
  - 광공업생산(전월비, %): (18.1월)-4.5→(2월)2.0→(3월)1.2
- 소매판매는 3월 중 전월비 0.74% 감소하여 전월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
  - 소매판매(전월비, %): (18.1월)-1.6→(2월)0.5→(3월)-0.7
- 수출은 2월 중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하여 2016년 11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

- 일본의 최근 수출 증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대중국 반도체 관련 제품에 의해 주도하는 모습
- 수출(전년동월대비, %): (↑'18.1월)12.3→(2월)1.8→(3월)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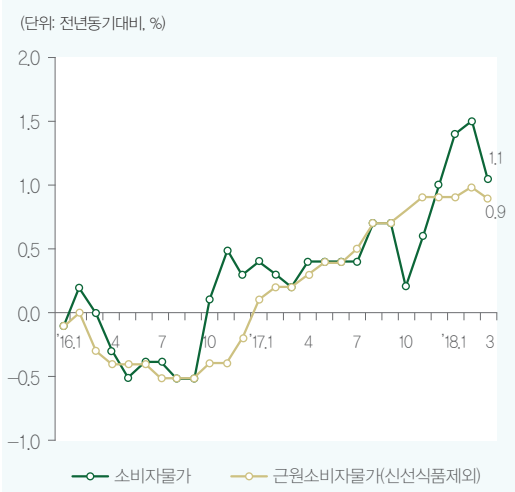
■ 가계의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인상률이 둔화되고 기상악화로 급등했던 신선식품가격이 안정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하며 전월(1.5%)보다 하락

- 아베노믹스 물가안정 목표(2.0%) 기준으로 활용되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는 48.9로 전월(48.6)보다는 상승하였으나, 3개월 연속 기준선(50)을 밑돌고 있음

- 3개월 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판단지수도 5개월 연속 하락하며 3월중 49.6을 기록

[그림 27] 일본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추이



자료: 일본 통계청, Bloomberg

[그림 28] 일본의 경기 및 선행 판단지수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중국경제는 일시적 요인으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내수는 성장세를 지속

■ 수출은 3월 중 춘절을 앞두고 기업들이 수출을 앞당긴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하여 2016년 2월 이후 13개월만에 감소

- 수출(전년동월대비, %): (↑'18.1월)11.0→(2월)44.1→(3월)-2.7
- 수입(전년동월대비, %): (↑'18.1월)36.9→(2월)6.1→(3월)14.4

■ 산업생산은 3월 중 전년동월대비 6.8% 증가, 소매판매는 9.8% 증가하며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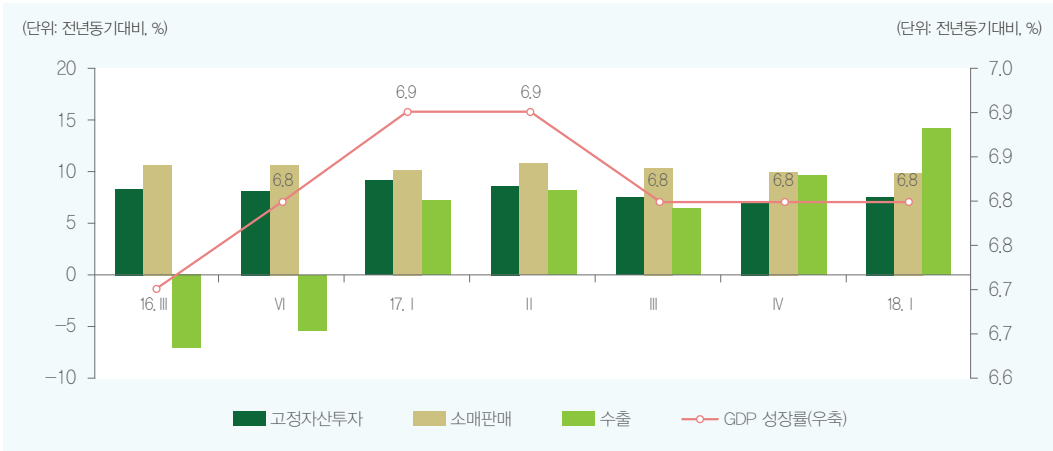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는 2월 중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하여 전월(2.9%)보다 하락

- 전월 한파로 인한 농산물 생산부진과 춘절연휴로 인한 식품과 교통가격 급등효과가 사라지면서 물가상승률이 둔화
- 근원물가도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하며 전월(2.5%)보다 둔화

■ 2018년 1/4분기 중국 GDP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8%로 안정적 성장세 지속

- 고정자산투자가 전분기보다 소폭 반등하고 소매판매가 성장세를 이어가며 내수부문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수출도 양호한 모습을 보임
- 고정자산투자(전년동기대비 누적, %): (17.3/4)7.5→(4/4)7.2→(18.1/4)7.5
- 소매판매(전년동기대비, %): (17.3/4)10.3→(4/4)9.9→(18.1/4)9.8
- 수출(전년동기대비, %): (17.3/4)6.4→(4/4)9.7→(18.1/4)14.1

[그림 29] 중국 GDP 지출부문별 성장률 추이



자료: 중국 통계국

## II

# 최근 일본경제의 특징 분석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오현희 경제분석관 (788-4657)

일본경제는 1990년대초 버블붕괴 이후 장기간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지속되었으나, 2013년부터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

-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은 금융완화정책, 확장적 재정정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성장전략 등 3가지 화살로 대표
- 아베정부의 경제정책 시행 이후 일본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고용시장이 개선
  - 일본기업은 2013년부터 시행된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엔화약세, 저금리, 법인세 인하 등으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
  - 일본의 고용시장은 실업률이 1993년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고용률과 유효구인배율(구인자수/구직자수)이 높아지는 등 개선되는 모습

그러나 임금상승세가 미약하고 가계소득이 정체됨에 따라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세도 중앙은행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음

- 임금상승률은 비정규직 취업자수 증가, 기업의 사내유보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정체
- 가계소비는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예비적 저축 증가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 등으로 회복세가 미약
- 물가는 2009~2012년간 지속되었던 디플레이션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이나, 대규모 금융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의 목표치 2% 수준을 하회

일본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기업수익이 증가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소비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

- 기업수익 개선과 고용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세가 미약하여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
- 일본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고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금상승이 뒷받침되어야 함
  - 장기침체기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임금상승과 물가상승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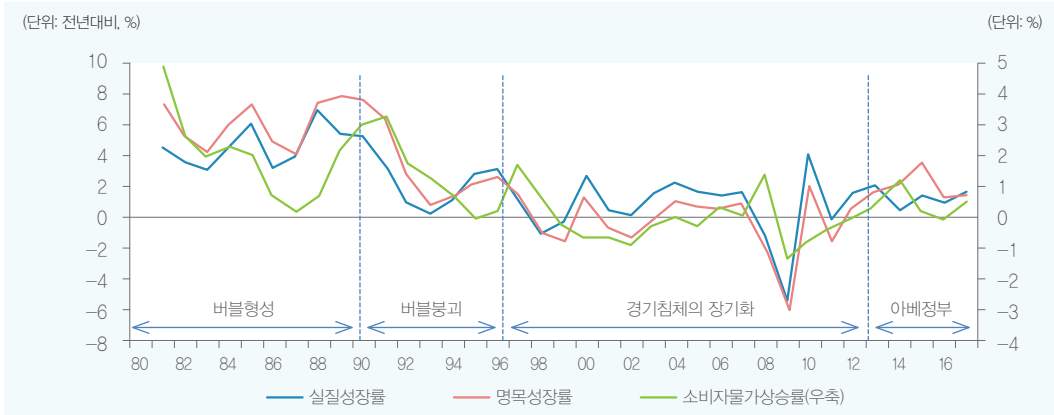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유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제고할 필요

# 01. 일본의 장기침체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 일본경제는 1990년대 초 버블붕괴이후 장기간 저성장·저물가를 지속

- 일본은 1985년 플라자합의로 엔화 가치가 급등하자 경기위축을 억제하고 내수부양을 위해 과도한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는 자산시장의 버블을 형성
- 이후 자산버블과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금융긴축 정책을 강화하면서 주가와 부동산 등 자산버블이 붕괴
- 자산버블이 붕괴되면서 1990년대 초반 이후 저성장·저물가·저고용으로 특징되는 장기침체기에 진입

[그림 1] 일본의 실질 및 명목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년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한 수치이며, 일본 총무성은 소비세율의 개정이 물가에 일시적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물가기조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세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제외한 '소비세조정지수(消費税調整済み指数)'를 발표  
 자료: 일본 내각부, 총무성, Bloomberg

## 아베정부는 저성장을 탈피하고 일본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2013년 초부터 과감한 경제활성화정책을 추진

-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은 완화적 금융·통화정책, 확장적 재정정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성장전략 등 '3가지 화살'로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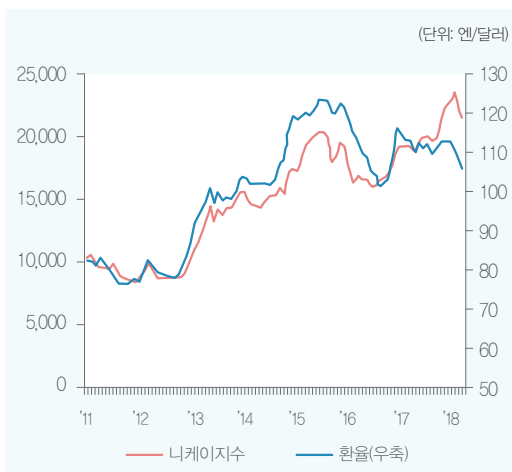
1)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戦略)」(2013.6)에서는 아베노믹스를 견인하는 3가지 경제정책을 '3가지 화살(第三の矢)'로 명명

- (통화정책) 양적·질적통화완화정책(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을 추진하며 통화량 공급을 늘리고 국채 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와 일본부동산투자신탁(J-Reits) 매입을 확대
  - 2016년 중국 및 신흥국의 경제둔화 우려가 확대되자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시행
- (재정정책) 공공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추경예산 확대편성 등 대규모 부양정책 시행
- (성장전략)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참여율 제고, 규제완화, 국제화 등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방안 시행

### 2013년 초부터 아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으로 일본경제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금융시장 지표가 개선되는 등 제한적이거나 성과를 보이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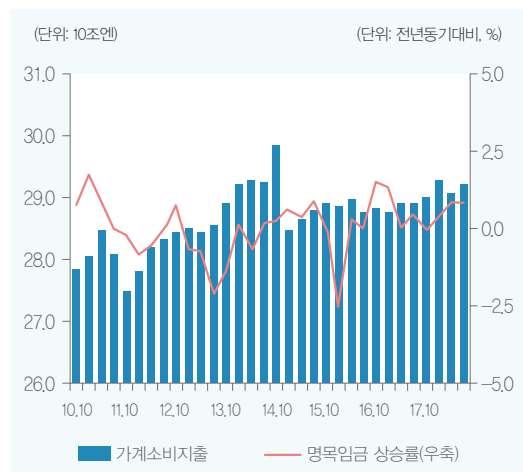
- 실질경제성장률은 2013년 2.0% 상승하며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이후 소비세율 인상,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등락
- 소비자물가는 2009~2011년 중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며 2013년 0.4%, 2014년 1.2%로 상승
- 금융완화 정책 시행으로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수출증가와 기업투자 개선 등으로 니케이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
- 그러나 임금소득 증가나 소비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가계부문은 회복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그림 2] 일본 니케이지수 및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3] 일본 가계소비 및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후생노동성, Bloomberg

[BOX 1] 아베정부의 2단계 경제정책

아베정부는 2016년 6월 ‘1억 총 활약 사회’ 실현을 위해 3개의 화살(강한경제, 육아지원,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 2단계의 구체적 계획 발표

- 아베노믹스 1단계가 성장전략 분야에서 부진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당면하자 아베노믹스 2단계를 추진
- (강한경제) 2022년 GDP 600조엔 달성을 목표로 기존의 정부 재정지출 확대, 금융 완화 등의 아베노믹스 1단계를 포함하며, 아베노믹스 1단계에서 부진했던 성장전략 분야의 구조개혁 및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을 강조
- (육아지원) 2026년 출산률 1.8명 달성을 목표로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과 육아 환경의 개선, 직장가 가정의 양립, 청년고용안정과 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을 포함
- (사회보장) 고령자 및 현역 세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간병기반 확보와 노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 제도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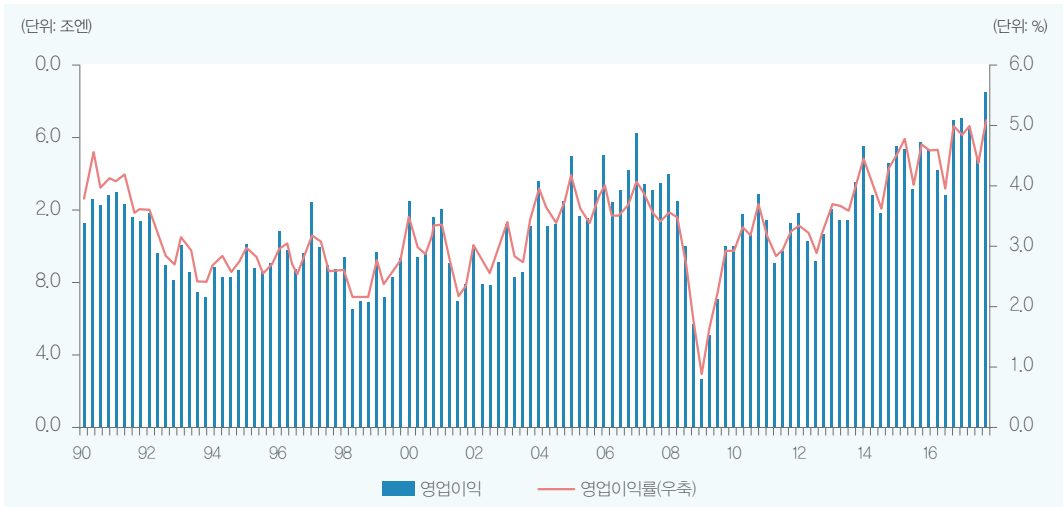
## 02. 최근 일본경제의 특징

### 가. 기업수익 증가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이 시행된 2013년부터 일본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

- 일본기업은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엔화약세, 저금리, 법인세 인하 등으로 2013년부터 영업 이익과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
- 2017년 중에는 세계경제 회복세 등에 힘입은 수출 증가 등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영업 이익 기록
  - 일본기업의 영업이익(조엔): (\*12,4Q)10,6→(\*13,4Q)13,6→(\*14,4Q)14,6→(\*15,4Q)15,7→(\*16,4Q)16,9→(\*17,4Q)18,5
  - 일본기업의 영업이익률(%): (\*12,4Q)3,3→(\*13,4Q)4,1→(\*14,4Q)4,3→(\*15,4Q)4,7→(\*16,4Q)5,0→(\*17,4Q)5,2

[그림 4] 일본기업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주: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  
 자료: 일본 재무성

### 기업의 수익성 향상은 엔화약세와 저금리 등 우호적 금융환경,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에 기인

- 엔달러 환율은 2012년 12월 아베정권 출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5년 말까지 44.9%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엔저효과에 힘입어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이 회복
  -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엔화의 특성상 글로벌 불안시마다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베정부 이전과 비교할 때 엔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sup>2)</sup>
  - 일본대기업 영업이익증가율(전년대비, %): ('13)35.9→('14)9.9→('15)9.3→('16)-5.4→('17)18.1
  - 일본중소기업 영업이익증가율(전년대비, %): ('13)-1.3→('14)15.9→('15)9.2→('16)4.1→('17)6.9
-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명목금리 뿐만 아니라 실질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저금리기조에 따른 기업의 이자지급비용 감소
  - 장기국채금리는 양적완화정책에 따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글로벌 경제불안에 따른 리스크 확산 우려로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함에 따라 명목 및 실질금리 모두 하락
  - 이에 따라 기업의 조달금리도 하락세를 지속하며 이자비용이 2009년 8.5조엔에서 2016년 4.9조엔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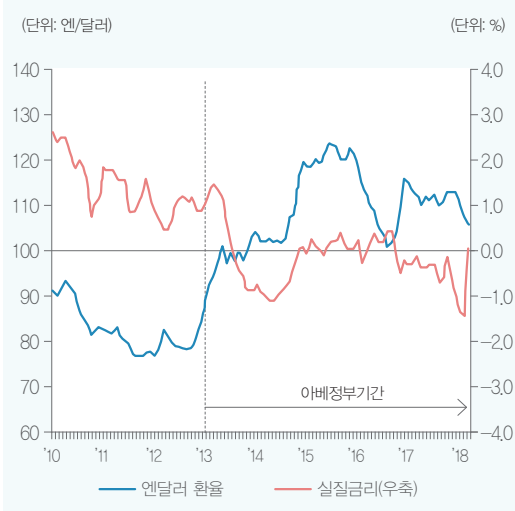
2) 2016년 들어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증가하면서 엔화강세가 나타남.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12월 미국의 트럼프대통령 당선 등 글로벌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일시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100엔선까지 하락

■ 아베정부 경제정책 중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2014년 법인세율 인하 계획을 발표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

— 일본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 ('12)39.5 → ('13)37.0 → ('14)37.0 → ('15)32.1 → ('16)30.0 → ('17)30.0 → ('18)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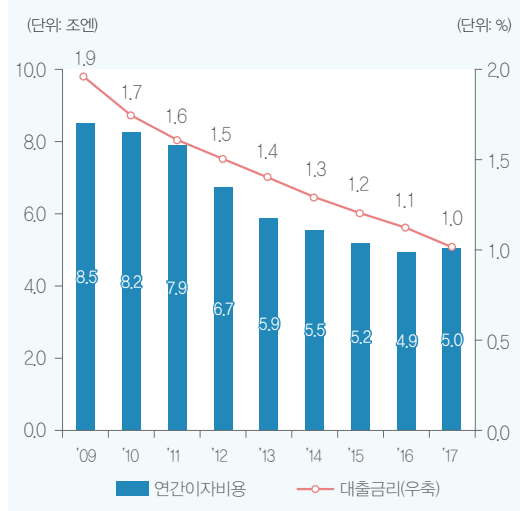
\*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 ('12)24.2→('13)24.2→('14)24.2→('15)24.2→ ('16)24.2→('17)24.2→('18)27.5

[그림 5] 엔달러 환율 및 실질금리 추이



주: 실질금리는 국제(10년물)금리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  
자료: Bloomberg

[그림 6] 일본기업의 이자비용 및 대출금리 추이



주: 대출금리는 금융 및 보험회사를 제외한 국내은행 대출약정 평균금리  
자료: 일본 재무성, 일본은행

## 나. 고용확대

### 최근 일본의 고용시장은 유효구인배율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1993년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등 개선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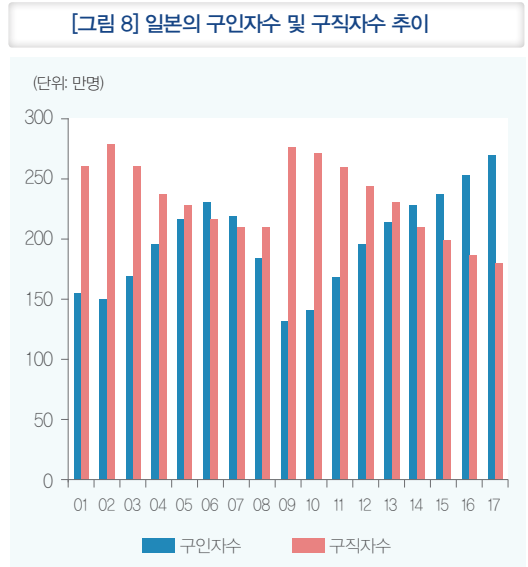
■ 2018년 2월 기준 구직자대비 구인자 비율인 유효구인배율<sup>3)</sup>은 1.58배로 상승세를 지속

—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급격하게 감소하였던 구인자수는 2009년부터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구직자수는 감소세를 나타내며 유효구인배율이 상승

3) 유효구인배율(구인자수/구직자수)이 '1'을 초과할 경우 기업의 노동수요가 개인의 노동공급보다 많다는 의미



주: 실업률과 유효구인배율은 계절조정 값  
 자료: 일본 총무성, Bloomberg



주: 연평균 수치  
 자료: 일본 총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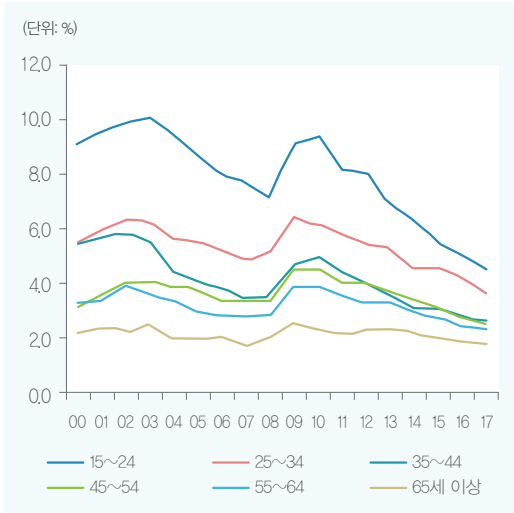
- 2018년 2월말 일본의 실업률은 2.5%로 2009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15~24세, 25~34세 청년층의 실업률 하락폭이 큼

  - 연령대별 실업률 변동(2009년 대비 2017년 비교, %p): (15~24세)△4.5, (25~34세)△2.7, (35~44세)△2.0, (45~54세)△1.5, (55~64세)△2.0, (65세 이상)△0.8
- 2018년 2월말 취업자수는 6,64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만명 증가하여 6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률은 59.3%로 2009년 대비 2.4%p 상승

  -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은 각각 68.7%, 50.5%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고용률은 2011년 46.5%를 저점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하락세를 나타내던 남성의 고용률은 2013년부터 상승세로 반전
- 일본은 OECD 주요국 중 고용률(15~64세 기준)이 높은 수준이며, 금융위기 이후 확대폭도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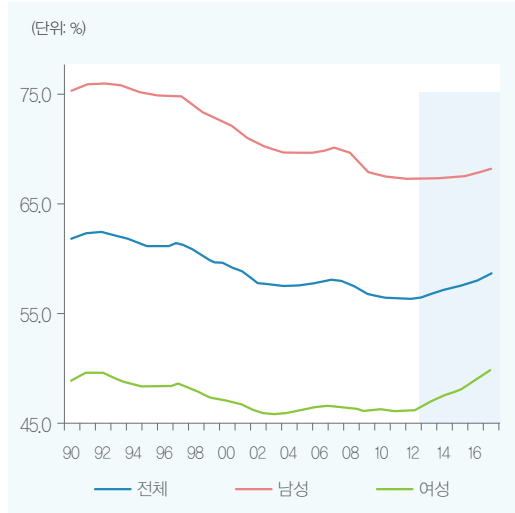
  - OECD 주요국 고용률(2016년 기준, %): 스위스 79.6, 스웨덴 76.2, 일본 74.3, 미국 69.4, OECD 평균 67.0, 한국 66.1, 프랑스 64.6
  - OECD 주요국 고용률 변동(2010년 대비 2016년 변동, %p): 체코 7.0, 폴란드 5.6, 일본 4.2, 한국 2.8, 미국 2.7, OECD 평균 2.5

[그림 7] 일본의 연령별 실업률 추이



자료: 일본 총무성, Bloomberg

[그림 8] 일본의 성별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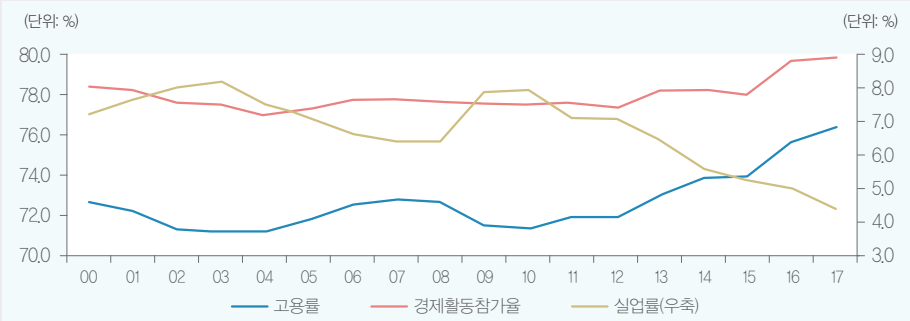
자료: 일본 총무성, Bloomberg

## [BOX 2] 일본 청년층 고용개선 요인

### 최근 일본 20대 청년층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상황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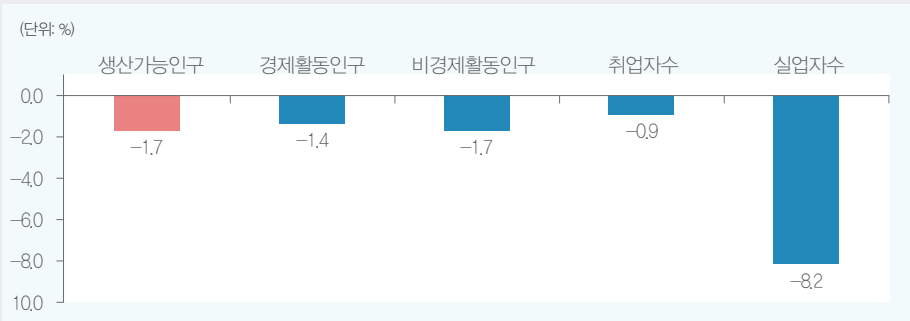
- 청년층의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은 2010년 7.9%로 정점을 기록한후 2017년 4.4%로 3.5%p 하락
- 청년층의 고용률(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은 2010년 71.4%로 저점을 기록한 후 2017년 76.3%로 4.9%p 상승
-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은 2012년 77.4%로 저점을 기록한 후 2017년 79.9%로 상승
- 일본의 청년 고용지표의 개선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고용정책과 경기회복 등으로 인한 일자리 확대와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에 기인
  - 생산가능인구 감소폭 보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수 감소폭이 작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승
  - 또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수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 실업률이 하락
  - 이는 인구구조 변화로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구직활동 중인 청년층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냄

[그림] 일본 20대 청년층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추이



자료: 일본 재무성

[그림] 일본 20대 청년층 2010~2017년 고용관련 지표 연평균 증가율



자료: 일본 재무성

## 다. 임금상승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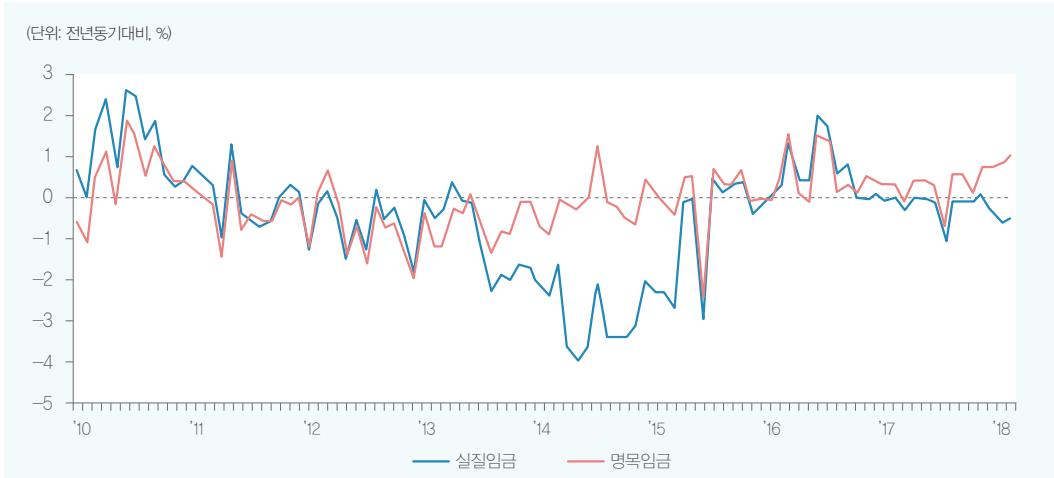
### 기업수의 개선과 고용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은 정체

-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2013년에도 월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증가율은 각각 -0.6%, -1.0%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후 명목임금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나 미흡한 수준이며 실질임금은 감소세를 지속

- 일본 명목임금 증가율(전년대비, %): ('13)-0.6→('14)-0.2→('15)0.0→('16)0.6→('17)0.3

- 일본 실질임금 증가율(전년대비, %): ('13)-1.0→('14)-2.9→('15)-0.8→('16)0.7→('17)-0.2

[그림 11] 일본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 증가율 추이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Bloomberg

## 일본의 임금상승률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비정규직 고령취업자수 증가, 기업의 사내유보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부진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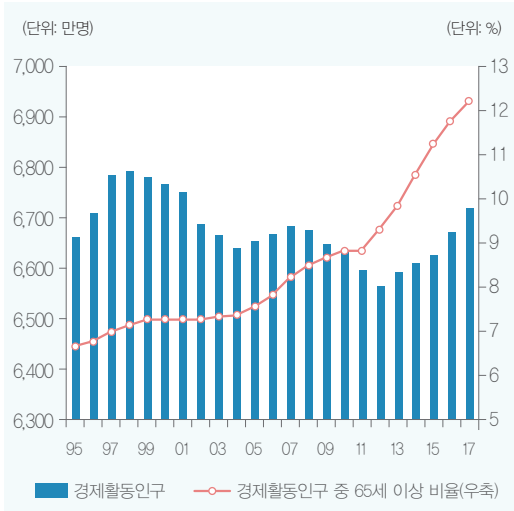
- 인구노령화, 정년연장 등으로 고령취업자수가 증가하였으며, 주로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낮은 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역할을 함
  - 일본의 경제활동인구(labour force)<sup>4)</sup>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1998년 6,793만명에서 2017년 6,720만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중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1990년 5.6%에서 2016년 12.2%로 증가
  -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정년연장<sup>5)</sup> 시행<sup>6)</sup>으로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수는 2002년 7.6%에서 2017년 12.4%까지 증가
  - 65세 이상 고령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61.9%에서 2017년 74.3%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취업자의 비정규직 비율인 37.3%(2017년)의 약 두배 수준

4) 경제활동인구(labour force)는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계

5) 2013년 4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제도' 등의 방법으로 65세 정년을 보장해야 함. 개정법 시행 이전에는 사용자 측이 노사합의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60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계속 고용할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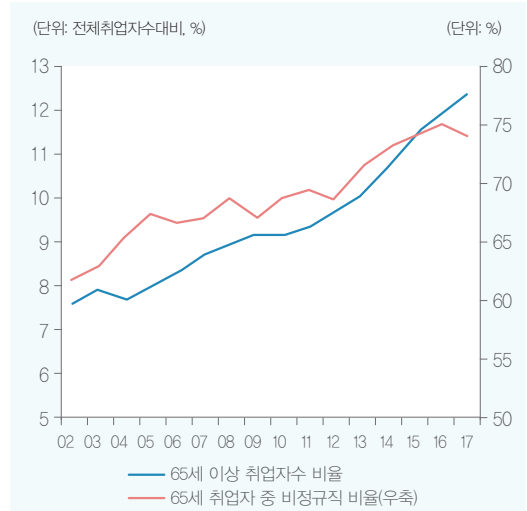
6)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확대에 대응하여 일본기업들이 임금상승을 억제하면서 30~40대 임금감소 효과도 나타남

[그림 12] 일본의 경제활동인구 추이



자료: 일본 총무성

[그림 13] 일본 고령층 취업자수 비율 및 비정규직 비율 추이



자료: 일본 총무성

■ 기업들이 실적개선에도 불구하고 사내유보금 등 현금성자산 보유 규모를 늘리고 종업원 임금인상에는 소극적인 것도 임금상승을 제약<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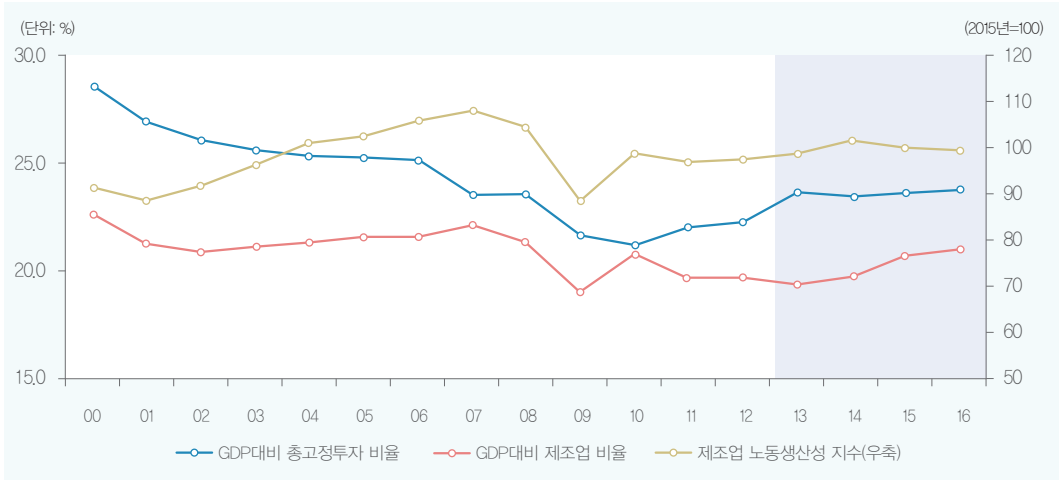
-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일본 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earned surplus)은 460조 6,122억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아베정부 이전 2011년(315조 5,550억엔) 보다 46.0% 증가한 수치
- 일본 전산업 사내유보금(조엔): ('11)315.6→('12)342.0→('13)372.6 ('14)403.2→('15)429.2→('16)460.6

■ 금융위기 이후 총수요 부진으로 인한 투자부문 위축, 제조업 비중 감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부진 등도 임금 정체의 원인으로 분석

- 2016년 기준 GDP대비 투자와 제조업 비중은 각각 23.7%, 21.2%로 금융위기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수준에 미치지 못함
- 2016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지수는 99.5로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04.4보다도 낮은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어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함

7)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5년 노동백서를 통해 기업이 사내유보금과 유가증권 투자 등을 늘리고 종업원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점을 임금 정체의 원인으로 지적

[그림 14] 일본의 GDP대비 제조업 및 투자 비중,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 추이



자료: IMF, 일본생산성본부,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

## 라. 가계소비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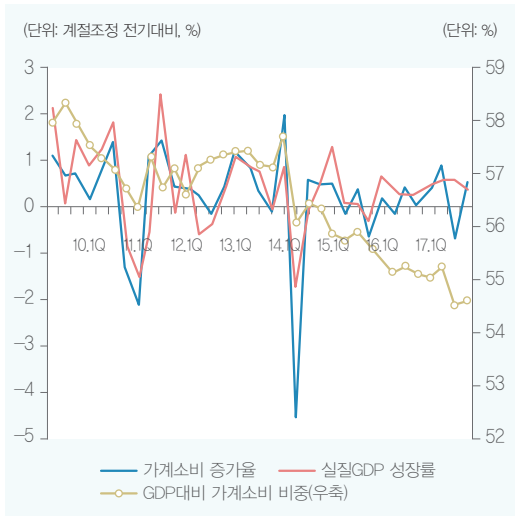
일본의 민간소비는 가계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예비적 저축 증가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 등으로 회복세가 미약한 모습

-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가계소비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으며 GDP대비 비중도 하락하는 등 정체되는 모습

– GDP대비 가계소비 비중(%): (‘13)57.1→(‘14)56.3→(‘15)55.7→(‘16)55.1→(‘17)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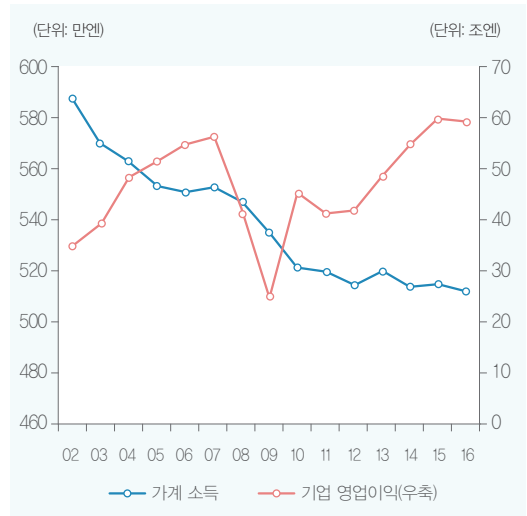
- 가계소비가 부진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기업부문의 수익 증가가 가계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해 가계소득이 정체되는데 기인

[그림 15] 일본 민간가계소비 증가율 및 GDP대비 비중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Bloomberg

[그림 16] 가계소득 및 기업소득 추이



주: 연 기준, 가계소득은 가구기준

자료: 일본 총무성,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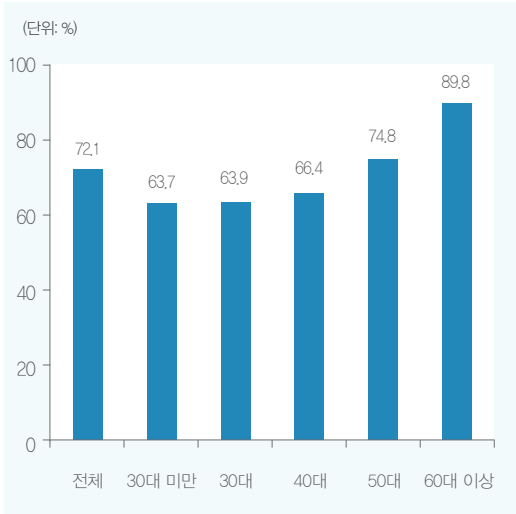
■ 또한, 고령층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예비적 저축 증가로, 20~30대 젊은세대는 높은 비정규직 고용 비율 및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소비성향이 하락

- 일본 내각부는 2016년 경제재정백서에서 20~30대 젊은층은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높고<sup>8)</sup> 육아나 교육을 위한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
- 특히 일본의 20~30대는 저성장·저물가 환경에서 성장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수입이 늘어나도 소비를 늘리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 고령층의 경우 평균기대수명 상승<sup>9)</sup>에 따라 소비지출을 줄여 의료 및 개호(介護, 간병·돌봄) 비용 증가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베노믹스 3년에 관한 일본언론의 여론조사(2016.2.26.) 결과 응답자의 42%가 가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었다고 응답하였으며, 70% 이상이 노후에 대한 불안, 연금·의료·개호 등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응답

8) 2017년 기준 일본 15~24, 25~34세, 35~44세의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47.7%, 25.9%, 28.6%

9) 0세의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연수인 기대수명은 1990년 78.9세에서 2015년 83.9세로 상승

[그림 17]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 추이



자료: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보고」

[그림 18] 2010년과 2017년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 차이



자료: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보고」

■ 2014년 4월 일본정부의 소비세 증세도 가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용 및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8%로 인상
- 일본의 가계소비지출은 2013년 2.4% 증가하였으나, 소비세율 인상이 단행된 2014년 0.8%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도 0.2% 감소
- 일본 가계소비 증가율(%): ('12)1.9→('13)2.4→('14)-0.8→('15)-0.2→('16)-0.1→('17)1.0

## 마. 물가상승률 미약

일본은 2009~2012년간 지속되었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나, 대규모 금융 완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일본은행의 목표치 2%(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기준)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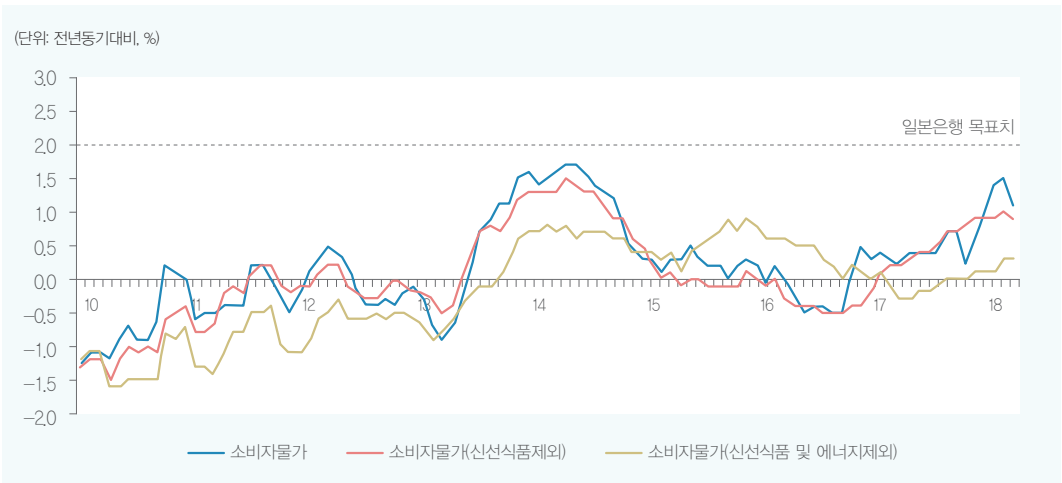
■ 일본은행은 아베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2013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2% 달성을 목표로 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고 4월 양적·질적 통화완화정책을 발표

-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의 신속한 달성을 위해 통화정책운용목표를 콜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하고 2년내 본원통화를 2배로 확대시키기 위해 연간 60~70조엔을 추가 공급하기로 함

– 2014년 10월에는 연간 국채매입을 80조엔으로 확대하고 국채의 평균잔존 만기를 7~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양적·질적 통화완화정책을 강화

- 2009~2012년 연평균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6%로 물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양적완화 시행 이후 2013년 0.4%, 2014년 1.2%<sup>10)</sup>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나타냄

[그림 19]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주: 소비세율 인상효과 제외  
 자료: 일본은행, 일본 총무성

-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마이너스 금리 도입<sup>11)</sup>, 2016년 장단기금리조정<sup>12)</sup>을 통한 금융 완화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지속된 금융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 임금정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총수요 부족, 소비세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2015년,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전년대비 0.8%, -0.1%를 기록

- 2017년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오름세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말 0.9%까지 상승 하였으나, 신선식품가격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0%대 수준에 머물러 목표치를 하회

10) 소비세인상 효과를 제외한 수치이며,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지 않을 경우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에 달함

11) 2015년 저유가 지속, 중국 경제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일본은 2016년 1월 사상 처음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초과지준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

12) 소비자물가상승 목표치인 2%의 안정적 달성시까지 단기금리는 마이너스(-0.1%) 수준을 유지하지만, 장기금리가 0%를 유지하도록 국채의 매입량을 조정

## 03. 요약 및 시사점

**일본경제는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을 통해 기업수익이 증가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소비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아베정부는 경제정책을 통해 기업수익 개선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고, 임금인상을 통해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선순환의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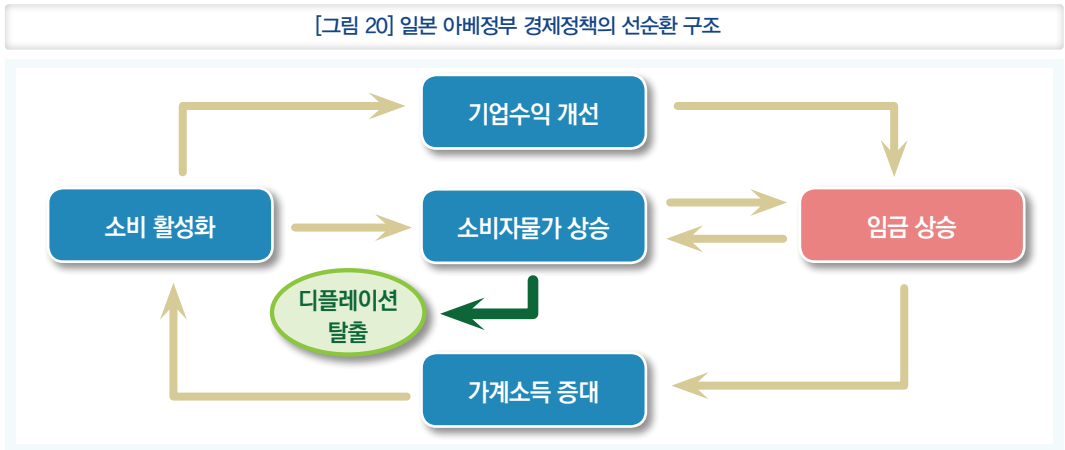
- 일본정부는 통화확대 정책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2% 수준으로 인상시키고 엔화약세와 실질금리 인하를 유도하여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고자 함
- 실질금리 인하와 엔화약세를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수익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이러한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고용확대와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민간소비를 회복시키고 다시 기업의 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형성을 유도

■ 그러나 기업수익 개선과 고용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세가 미약하여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

- 경제정책 시행으로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금융시장 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기업수익이 증가하고 고용지표도 개선
- 그러나 임금이 정체되며 가계의 소득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

■ 또한 지속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하회하고 있음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2013년 취임 당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 물가상승률 목표를 2년내 달성하겠다고 공표한 후 이를 6차례 연기하여 2019년 중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최근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달성시기 표기를 삭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일본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고 물가상승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금상승이 뒷받침 되어야 함

-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임금 하락이 디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비 증대를 위해 기업들의 임금인상을 촉구해옴
- 임금상승세가 지금과 같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통한 지속적 성장과 물가상승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
- 임금상승을 위해 임금인상 압력, 세제혜택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여 임금상승과 물가상승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sup>13)</sup>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함
  - 2010~2015년 임금에 대한 기여도를 노동생산성, 노동분배율,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기대인플레이션의 기여도가 낮아 일본의 시간당 임금 상승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남<sup>14)</sup>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 가계와 기업에 퍼져있는 디플레이션 사고방식<sup>15)</sup>이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해옴

13) 인플레이션 기대-임금상승-소비증대-물가상승-인플레이션 기대("최근 주요국 임금상승세 부진 원인 및 평가", 한국은행, 2017.9)

14) "Five years of Abenomics and policy issues going forward", Mizho Research Institute, 2017.12

15) 일본의 경제주체들은 장기간 저성장·저물가를 경험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약화되고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

■ 또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한편 기업의 임금인상 여력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여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필요

- 아베 정부는 2020년까지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성혁명 · 집중투자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생산성향상으로 기업의 임금인상 여력이 확대되는 선순환을 기대
- 구체적으로는 매년 3% 이상의 임금인상, 2%의 생산성 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관련 예산 확충, 임금인상과 설비투자 실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경감, 규제완화 등을 시행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경제와 유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필요**

■ 우리경제는 임금상승이 정체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생산성저하, 저출산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이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유사

■ 통화당국은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향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물가안정목표 준수 의지를 분명히 전달할 필요

- 최근 일본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임금상승을 통한 선순환 고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
- 우리나라는 기대인플레이션이 2%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도 정체<sup>16)</sup>되고 있어 우리경제의 기초적 물가흐름과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한 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

■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 성장률 제고가 뒷받침 되어야 함

- 일본의 경직적 노동시장, 노동인구 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노동생산성은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임금 정체를 가져온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제4차 아베내각은 세제, 예산, 규제개혁 등 모든 정책을 동원하여 생산성혁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일본과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

16) 명목임금상승률은 2010년 6.8%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7년 2.7%를 기록하였으며, 실질임금상승률은 2010년 3.8%에서 2017년 0.8%로 하락  
 17) OECD 주요국 시간당 노동생산성(2016년, 2010년 기준 PPP, US 달러): 아일랜드(83.1), 미국(63.5), 프랑스(60.0), 독일(59.9), 유로지역(53.1), OECD 평균(47.1), 일본(41.6), 한국(32.9)

# Ⅲ

## 가계 · 기업소득간 성장 불균형 원인 분석 및 시사점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권일 경제분석관 (788-4677)

1995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이 연평균 6.6% 증가하는 동안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은 각각 6.0%, 8.1% 증가하여,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증가

가계소득의 상대적 저성장 문제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나, 격차는 우리나라(2.1%p)가 OECD 국가들의 평균(0.7%p)에 비해 더 큰 상황

-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 비해 가계 · 기업소득 간 성장격차가 크게 나타난 원인은 우리나라 가계에서 자영업의 영업잉여와 이자수입의 비중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기 때문

가계 · 기업소득간 성장을 격차는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인 임금 및 급여, 자영업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등의 증가율이 모두 기업소득 증가율을 하회함에 따라 심화

- 가계소득/기업소득 배율이 2000년 3.9배에서 2017년 2.5배로 1.4배p하락하였는데, 임금 · 급여가 0.6배p, 자영업 영업잉여 0.6배p, 순재산소득이 0.2배p 기여
- (임금 · 급여)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 가계에 임금 및 급여로 분배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가계소득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
- (자영업 영업잉여)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자영업의 영업잉여 증가율이 1990년대 10%대 성장에서 2000년대 이후 1%대 성장으로 급격히 하락
- (순재산소득) 저금리 기조 및 주택자금 차입 등으로 가계의 부채가 예금보다 급격히 증가해 순재산소득 구성항목인 순이자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가계소득 성장 둔화

가계소득의 저성장 문제의 개선을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전통적 자영업 영역인 도소매업, 음식 · 숙박업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생존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부가가치화 전략과 과당경쟁 문제 등을 개선할 필요

## 01. 분석 배경

###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득의 증가율이 기업소득의 증가율을 하회하는 가계와 기업간 소득의 성장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양측인 가계와 기업 사이에 장기간 소득의 성장 불균형이 나타나면, 한 나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가계와 기업간 소득의 성장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도입<sup>1)</sup>
-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도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 평가와 경제구조 분석의 중점이 GDP 등 생산 활동 측면에서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소득 발생, 분배 및 지출 활동 측면으로 전환되는 추세

### 1995~2017년 기간 중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이 연평균 6.6% 증가하는 동안 가계 소득과 기업소득은 각각 6.0%, 8.1% 증가하여,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증가

- 동 기간 경제주체 중 가계부문만 소득 증가율이 GNI 증가율을 하회(-0.6%p)
  - 가계부문 소득 증가율과 GNI 증가율과의 차이는 1995~2000년 -0.4%p, 2001~2005년 -0.7%p, 2006~2010년 -2.0%p, 2011~2015년 0.8%p, 2016~2017년 -0.7%p로 나타남
  - 2011~2015년 중 0.8%p로 개선 추세를 보이던 가계소득의 증가율은 2016~2017년 -0.7%p로 다시 하회로 전환

[표 1] GNI 증가율과 제도부문별 소득 증가율

	1995~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17	1995~2017
GNI	8.1	7.5	7.1	4.1	5.1	6.6
가계	7.7 (-0.4)	6.8 (-0.7)	5.1 (-2.0)	4.9 (0.8)	4.4 (-0.7)	6.0 (-0.6)
기업	7.6 (-0.5)	10.9 (3.5)	13.2 (6.1)	2.1 (-2.0) <sup>2)</sup>	5.3 (0.2)	8.1 (1.5)
정부	10.6 (2.5)	5.9 (-1.6)	6.4 (-0.7)	4.1 (0.0)	7.8 (2.7)	7.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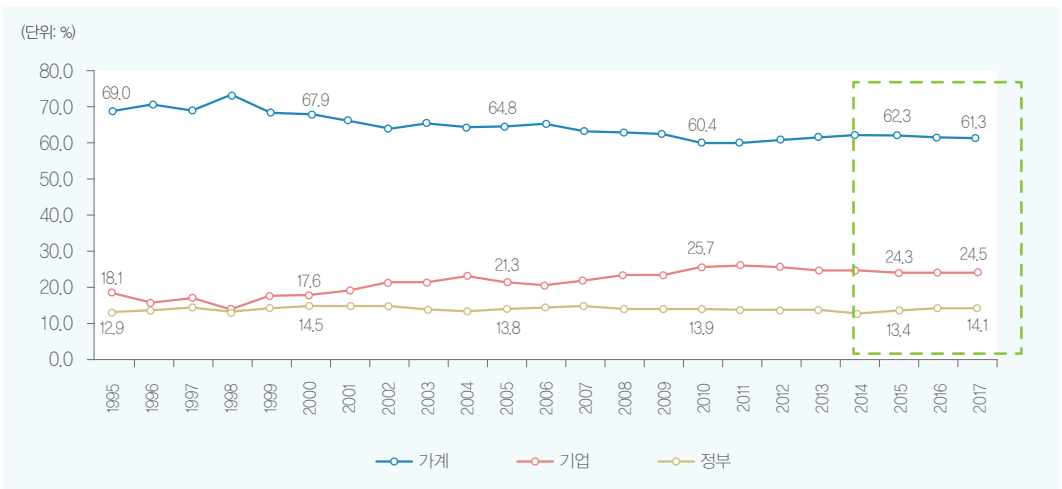
주: 1) ( )는 GNI 증가율과의 차이(%p)

2) 2011~2015년 기간 중 기업소득이 감소를 보인 것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감소에 기인

자료: 한국은행의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가계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9.0%에서 2017년 61.3%로 감소(-7.7%p)한 반면, 동 기간 기업소득 비중은 18.1%에서 24.5%로 증가(6.4%p)
  - 가계소득의 GNI 대비 비중은 1995~201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 2015년 62.3%로 소폭(1.9%p) 반등 후 2017년 61.3%로 다시 감소
  - 반면 기업소득의 GNI 대비 비중은 1995~2010년까지 추세적으로 증가하다, 2015년 24.3%로 소폭(-1.4%p) 반락 후 2017년 24.5%로 다시 증가

[그림 1] 제도부문별 GNI 대비 소득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의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하에서는 가계와 기업소득의 증가율을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소득의 성장 불균형 원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1995~2016년까지 이용 가능한 국민계정 자료가 있는 OECD 국가 통계를 이용하여, 제도부문별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격차, 가계소득 비중의 변화폭 등을 비교

1) 근로소득중대세제는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이고,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당기소득 일정액 중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과세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기업에서 가계부문으로 소득환류가 늘어나도록 유인하는 제도 (단,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환류대상 및 가중치 등을 조정하여 2018년부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전환되어 운영)

## 02. 가계·기업 소득의 국제비교

1995~2016년 기간 중 OECD 국가들의 평균 GNI는 연평균 4.7% 증가하는 동안, 가계 소득 및 기업소득은 각각 4.4%, 5.2% 증가하여,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GNI 대비 가계 소득 비중이 하락

- 1995~2016년 기간 중 OECD 국가들의 평균<sup>2)</sup> 가계소득 증가율은 GNI 증가율을 하회(-0.3%p)하였으나, 하회 폭은 우리나라(-0.5%p)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1995~2016년 기간 중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증가율 격차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1%p, OECD 평균은 -0.8%p로 우리나라의 가계·기업소득간 성장률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 우리나라와 OECD 국가 평균 제도부문별 소득 증가율 비교

(단위: 연평균 %, %p)

	한국(A)			OECD 국가 평균(B)			차이(A-B)		
	1995~2010	2011~2016	1995~2016	1995~2010	2011~2016	1995~2016	1995~2010	2011~2016	1995~2016
GNI	7.5	4.4	6.6	5.5	2.8	4.7	2.0	1.6	1.9
가계(C)	6.6 (-0.9)	4.9 (0.5)	6.1 (-0.5)	5.2 (-0.3)	2.7 (-0.1)	4.4 (-0.3)	1.4 (-0.6)	2.2 (0.6)	1.7 (-0.2)
기업(D)	10.1 (2.6)	3.6 (-0.8)	8.2 (1.6)	6.3 (0.8)	2.6 (-0.2)	5.2 (0.5)	3.8 (1.8)	1.0 (-0.6)	3.0 (1.1)
정부	8.1 (0.6)	4.2 (-0.2)	7.0 (0.4)	6.9 (1.4)	3.8 (1.0)	6.0 (1.3)	1.2 (-0.8)	0.4 (-1.2)	(1.0) (-0.9)
격차(C-D)	-3.5	1.3	-2.1	-1.1	0.1	-0.8	-2.4	1.2	-1.3

주: ( )는 GNI 증가율과의 차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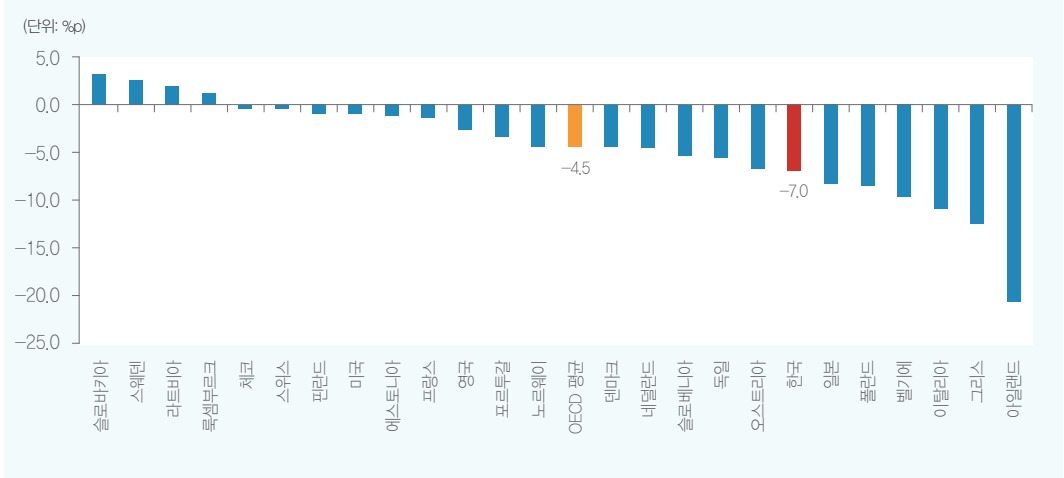
자료: OECD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 하락폭(-7.0%p)은 OECD 25개국 중 상위 7번째에 해당하며, OECD 국가들의 평균 하락폭(-4.5%p)보다 크게 나타남

- 1995~2016년 기간 중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이 상승한 국가는 OECD 25개국 중 4개국에 불과하며, 가계소득의 상대적 저성장 문제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도 발생

2) OECD 회원국 중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분석에 필요한 자료(GNI, 가계 및 기업소득, 가계의 임금·급여,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순이자소득)가 모두 있는 25개국(한국 포함)을 대상으로 분석

[그림 2] 1995~2016년 기간의 OECD 국가의 GNI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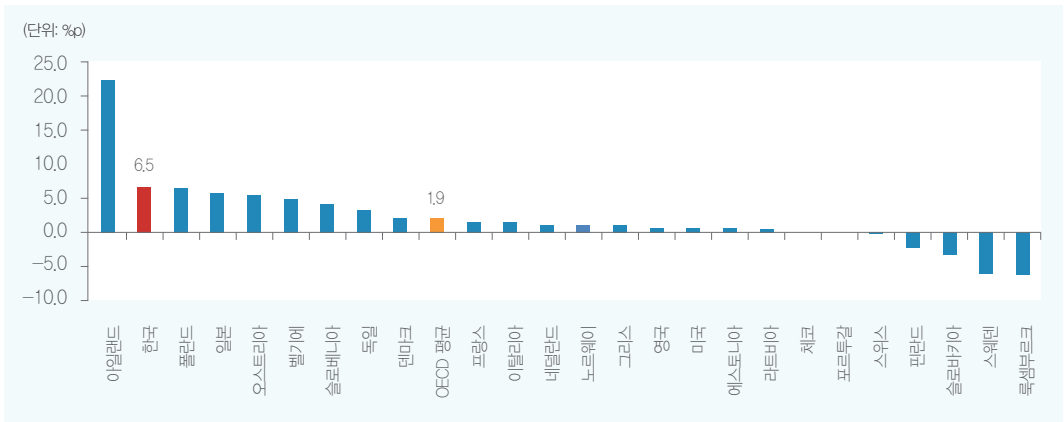


자료: OECD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 증가폭(6.5%p)은 OECD 25개국 중 상위 2번째에 해당하며, OECD 평균 증가폭(1.9%p)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

- 1995~2016년 기간 중 기업소득 비중이 상승한 국가는 OECD 25개국 중 19개국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소득 비중이 증가

[그림 3] 1995~2016년 기간의 OECD 국가의 GNI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 변화



자료: OECD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03. 가계·기업소득간 성장 불균형 발생원인 분석

#### 가. 분석방법

국민계정 체계내 시장가격으로 나타나는 **본원소득분배계정(A)**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2차소득분배계정(B)**은 고려하지 않음

- 기업의 소득이 가계부분으로 직접적으로 분배되는 과정만을 나타내기 위해 조세, 사회보험 등 재분배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2차 소득분배계정은 고려하지 않음

[표 3]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가계·기업·정부소득 분류 기준

				가계소득	기업소득	정부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	본원소득분배계정(A)	요소비용국민소득	피용자보수	임금 및 급여	○		
				고용주의 사회부담금	○		
			영업잉여	법인(금융기관 포함)		○	
				일반정부			○
				가계 및 비영리단체	○		
			순재산소득	순이자소득	○	○	○
		법인기업분배소득		○	○	○	
			배당금	○	○	○	
			(+) 생산 및 수입세 (공제)보조금			○	
		(+) 2차소득분배계정(소득세, 사회부담금, 사회수혜금, 기타경상이전 등) (B)		법인(금융기관 포함)		○	
	일반정부				○		
	가계 및 비영리단체		○				

주: 음영부분은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임

소득격차 지표로는 GNI 대비 가계부문 및 기업부문 소득의 **소득배율(가계소득/기업소득)** 과 **비율의 상대비중(가계소득 비중/기업소득 비중)**을 사용

- 소득배율은 국민계정상 기업소득 대비 가계소득의 비율(가계소득/기업소득)로 나타내고, 소득배율의 증가는 성장격차 완화, 소득배율의 감소는 성장격차 확대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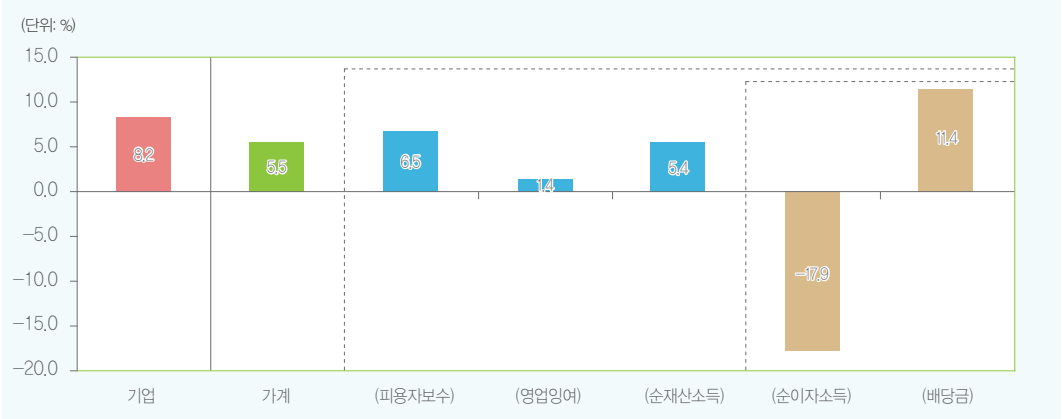
- 상대비중은 GNI에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대비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가계소득 비중/기업소득 비중)로 나타내고, 상대비중의 증가는 소득격차 완화, 감소는 소득격차 확대를 의미

## 나. 가계·기업소득간 성장 불균형 발생원인

2000~2017년 기간 중 가계소득이 기업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는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인 임금 및 급여, 자영업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등의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기업소득 증가율을 하회한 것에 기인

- 2000~2017년 기간<sup>3)</sup> 중 가계소득은 연평균 5.5% 증가한 반면, 기업소득은 연평균 8.2% 증가하여 연평균 2.7%p의 성장률 격차 발생
  - 동 기간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항목 중 임금 및 급여는 6.5% 증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는 1.4% 증가, 순재산소득은 5.4% 증가(순재산소득 구성항목 중 순이자소득의 증가율은 -17.9%, 배당금의 증가율은 11.4%)

[그림 4] 가계소득 구성항목의 연평균증가율 (2000~2017년)



주: 순이자소득은 2000~2015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임(2016~2017년 기간 중 순이자소득(=이자수입 - 이자지출)이 적자(-)로 나타나 연평균 증가(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를 계산이 불가능해 적자로 나타난 기간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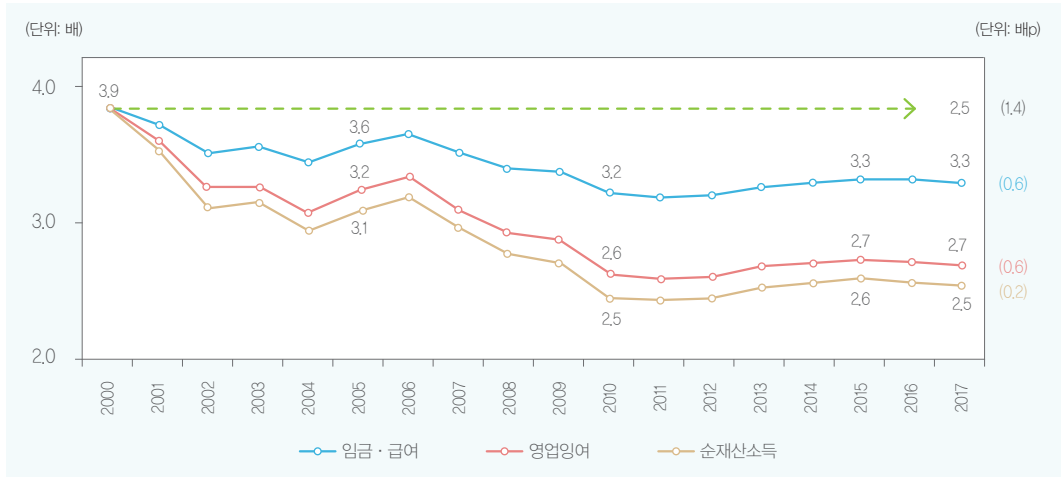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의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기업소득의 절대액이 감소(1997년 88.1조원 → 1998년 72.0조원: -18.2%)하여 소득배율이 급격히 증가(1997년 4.15배 → 1998년 5.2배)하는 특이요인이 존재하여, 분석기간을 2000년 이후로 설정

## 2000~2017년 기간 중 기업소득 대비 가계소득 배율은 2000년 3.9배에서 2017년 2.5배로 1.4배p 하락

- 동 기간의 가계소득/기업소득 배율 하락폭(1.4배p)에 대한 기여도는 임금 및 급여 0.6배p, 자영업 영업 이익 0.6배p, 순재산소득 0.2배p로 추정됨<sup>4)</sup>

[그림 5] 소득배율(가계소득/기업소득) 하락의 소득 항목별 기여도 추이



### 기여도 분석 방법

- 가계소득/기업소득 배율(B/A) 하락에 대한 각 가계소득 구성항목(임금·급여, 자영업 영업이익, 순재산소득)의 기여도는 다음의 방식으로 분석<sup>5)</sup>

- ① 분석기간 중 가계소득이 기업소득과 동일한 증가율로 증가했다고 가정
- ② 가계소득이 기업소득과 동일한 증가율로 증가했을 때의 배율(B1/A)을 기준으로, 가계소득 구성 항목 중 한 항목만 실제 증가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항목은 기업소득과 같은 증가율로 증가했다고 가정하고 배율(B2/A) 추정
  - 두 배율과의 차이 $[(B1/A)-(B2/A)]$ 를 통해 각 구성항목의 기여도 추정
- ③ 임금·급여, 자영업 영업이익, 순재산소득 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

4) 기여도 분석은 소득배율이 일정 시점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요인을 분해하여 분석하는 것  
5)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는 한국은행(2013)의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가 있음

## (1) 임금 및 급여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 가계에 임금·급여로 분배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낮아지면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간 성장격차 발생

- 2001~2017년 기간 중 가계의 임금·급여 연평균증가율(6.3%)이 기업의 영업잉여 연평균증가율(7.5%)을 하회
  - 2000년대 이후 임금·급여의 연평균 증가율이 하락(2001~2010년 7.2% → 2011~2017년 5.0%)
- 2001~2017년 기간 중 임금·급여가 기업 영업잉여보다 연평균 1.2%p 낮게 성장
  - 임금·급여와 기업 영업잉여의 성장률 격차는 2000~2005년 중 1.1%p에서 2006~2010년 중 5.1%p로 확대, 2011~2015년 중 임금 증가율이 기업소득 증가율보다 높았으나, 2016~2017년 중 다시 기업 영업잉여가 2.6%p 높게 성장

[표 4] 임금·급여 증가율과 기업 영업잉여 증가율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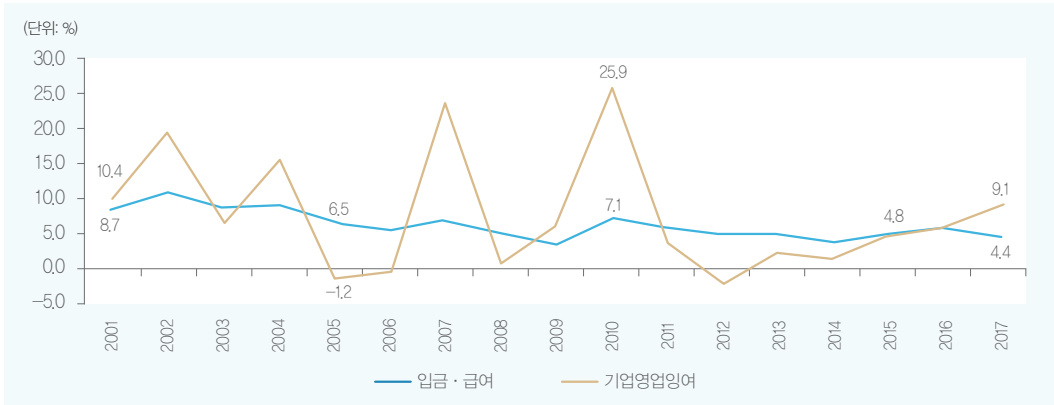
(단위: 연평균, %, %p)

	2001~2010			2011~2017		2001~2017	
	01~05	06~10		11~15	16~17		
GNI	7.7	6.8	7.2	4.4	5.0	4.6	6.1
임금·급여(A)	8.8 (1.1)	5.6 (-1.2)	7.2 (0.0)	5.0 (0.6)	5.0 (0.0)	5.0 (0.4)	6.3 (0.2)
기업 영업잉여(B)	9.9 (2.2)	10.7 (3.9)	10.3 (3.1)	2.1 (-2.3)	7.6 (2.6)	3.6 (-1.0)	7.5 (1.4)
격차(A-B)	-1.1	-5.1	-3.1	2.9	-2.6	1.4	1.2

주: ( )는 GNI 증가율과의 차이(%p)

자료: 한국은행의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6] 임금·급여 증가율과 기업 영업잉여 증가율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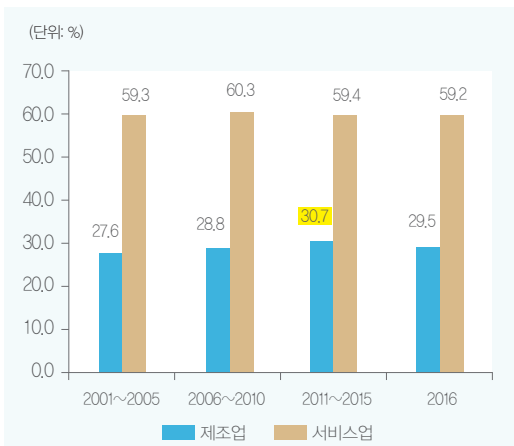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의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우리경제가 수출주도형 제조업 위주로 성장하여 왔으나, 제조업은 1인당 부가가치는 큰 반면 고용창출 효과는 낮고, 서비스업은 고용창출 효과는 크나 상대적으로 저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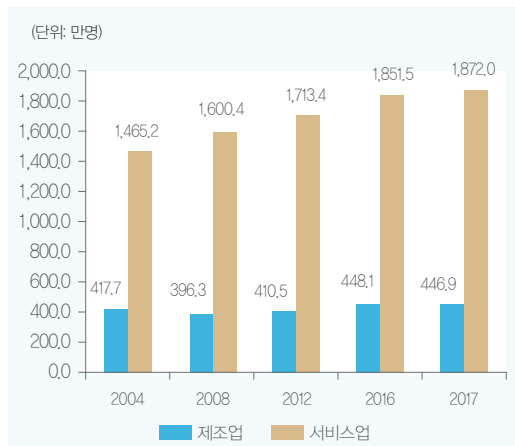
- 국내총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2001~2005년 기간 평균 27.6%에서 2006~2010년 28.8%, 2011~2015년 30.7%, 2016년 29.5%로 2001~2016년 기간 중 1.9%p 증가
- 산업별 취업자수는 2004~2017년 기간<sup>8)</sup> 중 서비스업은 406.8만명 증가(연평균 1.9%)한 반면, 제조업은 29.2만명 증가(연평균 0.5%)

[그림 7] 총부가가치 대비 산업별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8]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와 같이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만 낮은 생산성으로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
- 2005~2015년 기간 중 제조업 월평균 임금이 130.9만원에서 191.4만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서비스업은 115.1만원에서 151.6만원으로 증가
- 따라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동 기간 중 1.14배(15.8만원)에서 1.26배(39.8만원)로 확대

[표 5] 제조업 및 서비스업 월평균 임금 격차(중소기업 기준)

(단위: 만원, 배)

	제조업(A)	서비스업(B)	격차	
			금액 (A-B)	비중 (A/B)
2005	130.9	115.1	15.8	1.14
2015	191.4	151.6	39.8	1.26

주: 월평균 임금은 중소기업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기준) 근로형태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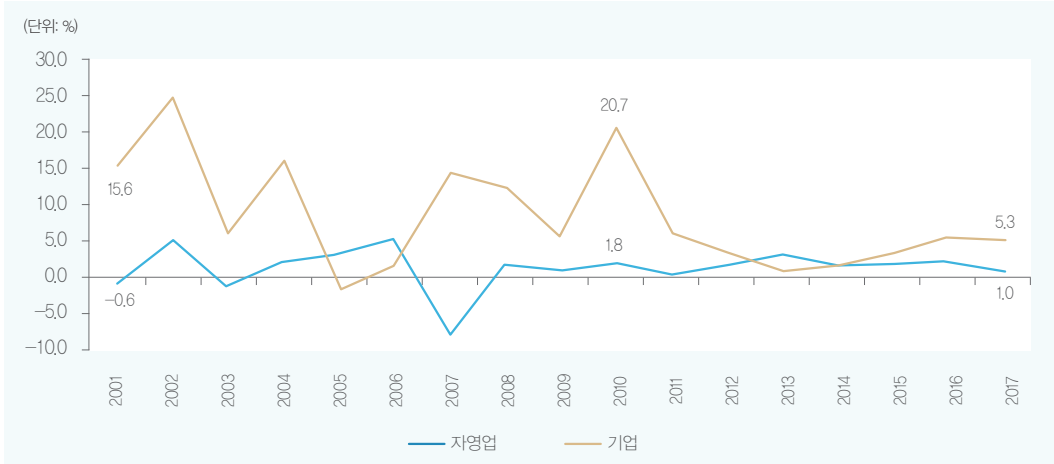
## (2) 자영업 영업잉여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자영업자의 영업잉여 증가율이 1990년대 10%대 성장에서 2000년대 이후 1%대 성장으로 급격히 낮아진 점도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성장을 격차 확대를 초래

- 2000년대 들어 자영업 영업잉여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기업 영업잉여 증가율과의 격차는 평균 6.1%로 나타남
  - 자영업 영업잉여 증가율 (1990년대) 10.9% → (2001~2010년) 1.0% → (2011~2017년) 1.4%
- 자영업(A)과 기업(B)의 영업잉여 성장을 격차(A-B)는 2001년 중 16.2%p에서 2010년 중 18.9%p까지 확대되었다가, 2013~2014년 중에는 격차가 잠시 축소되었으나, 2015년부터 다시 확대

6) 2004년 이전 통계가 없어 2004년부터 분석

[그림 9] 자영업 영업잉여 증가율과 기업 영업잉여 증가율과의 비교



자료: 한국은행의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서비스업 시장의 대형화 · 전문화로 자영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도소매, 음식 · 숙박업 등 전통적 자영업 영역에서 경쟁의 심화로 자영업 생존율이 낮아지고, 영업이익률도 크게 둔화된 것이 주요 원인

- 도소매업과 음식 · 숙박업의 5년차 생존율은 2012년 기준 각각 25.6%, 17.7%에서 2015년 각각 24.2%, 17.9%로 나타남

[표 6] 도소매업과 숙박 · 음식점업 5년차 생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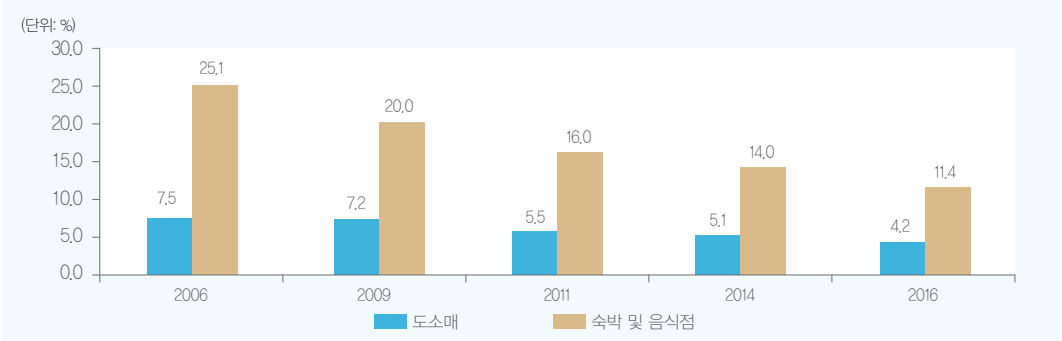
(단위: %)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	2012	2013	2014	2015	
					1년차	5년차
도소매	전체	25.6	25.0	24.3	58.8	24.2
	1인	24.3	23.8	23.1	56.3	22.8
숙박 및 음식점	전체	17.7	17.7	17.3	59.5	17.9
	1인	17.4	17.3	16.9	57.7	17.5

자료: 통계청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도소매업의 영업이익률은 2006년 7.5%에서 2016년 4.2%로 둔화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의 영업이익률은 2006년 25.1%에서 2016년 11.4%로 둔화

[그림 10] 도소매업과 숙박 · 음식점업 영업이익률



주: 자영업영업이익률=(매출액 - 영업비용)/매출액은 도소매업조사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자료: 통계청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07년 이후 소매업과 음식업에 대기업이 진출이 활발해졌고,<sup>7)</sup> 전자상거래(인터넷, TV홈쇼핑 등)의 증가로 무점포 판매 확산 등에 따라 자영업자수가 2000년대 들어 감소로 전환되었다는 점도 자영업 영업이익 둔화에 영향<sup>8)</sup>

### (3) 순재산소득

순재산소득 구성항목 중 배당금<sup>9)</sup> 등은 증가하였으나, 가계의 부채의 증가속도가 예금 증가 속도에 비해 빨라 순이자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가계 소득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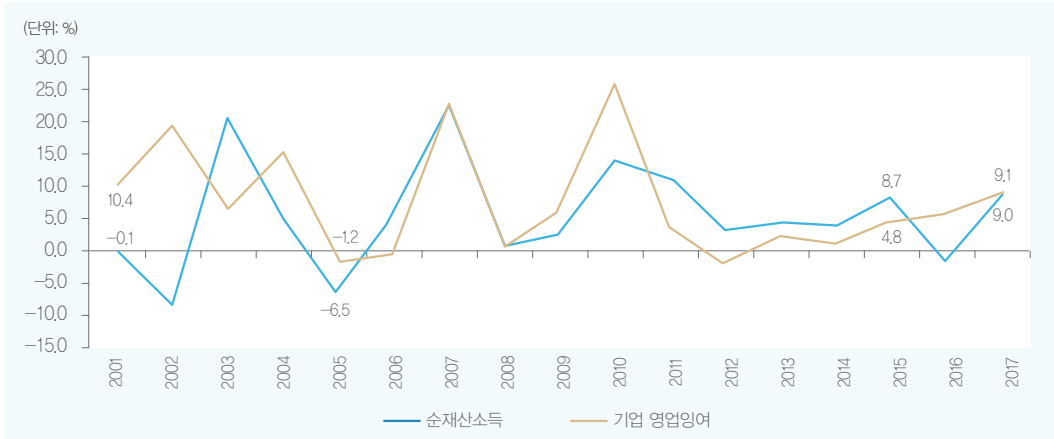
- 순재산소득 증가율은 2000~2010년까지는 기업의 영업잉여 증가율을 하회하였고, 2011~2015년 기간에는 기업의 영업잉여 증가율을 소폭 상회하였다가, 2017년은 기업의 영업잉여 증가율과 거의 동일한 수준

7) 한국노동연구원(2016)에 따르면 대형종합소매업(대형마트, 아웃렛, 백화점 등 포함) 업체 수가 2007년 459개에서 2014년 634개로 증가

8) 한국노동연구원(2016) 따르면 모바일 거래의 급속한 증가로 온라인쇼핑몰 판매액은 2004년 7.8조원에서 2015년 53.9조원으로 증가하였고, 무점포 소매의 비중도 2010년 9.5%에서 2015년 12.3%로 증가

9) 가계의 재산소득은 크게 이자소득과 법인기업분배소득으로 구성되고, 법인기업분배소득은 배당금과 준법인기업소득인출로 구성됨. 준법인기업 소득인출은 준법인기업의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배당금이나, 준법인기업은 소득발생과 처분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설정한 항목으로 2000년 11.3조원에서 2017년 54.4조원으로 연평균 9.6% 증가

[그림 11] 순재산소득 증가율과 기업 영업잉여 증가율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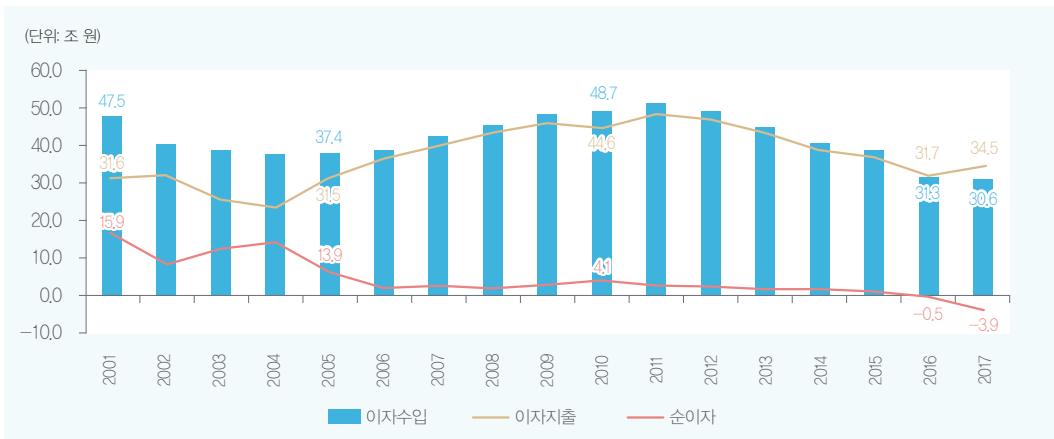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의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순이자소득(이자수입-이자지출)은 2001년 15.9조원에서 2016년 -0.5조원, 2017년 -3.9조원으로 2년 연속 적자로 전환

- 가계의 이자수입은 2001년 47.5조원에서 2017년 30.6조원으로 16.9조원 감소(-2.3%)한 반면, 이자지출은 동기간 31.6조원에서 34.5조원으로 2.9조원 증가(1.9%)

[그림 12] 가계의 이자수입, 이자지출 및 순이자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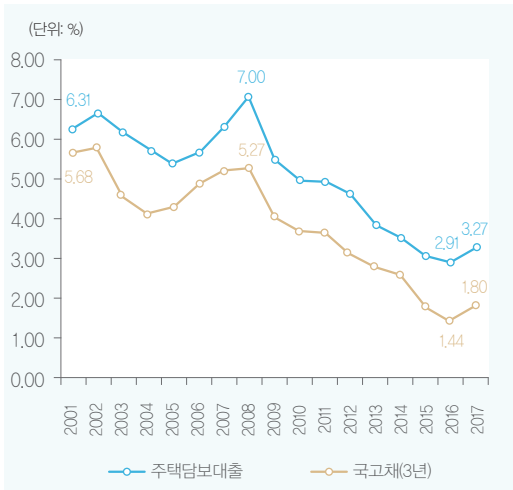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의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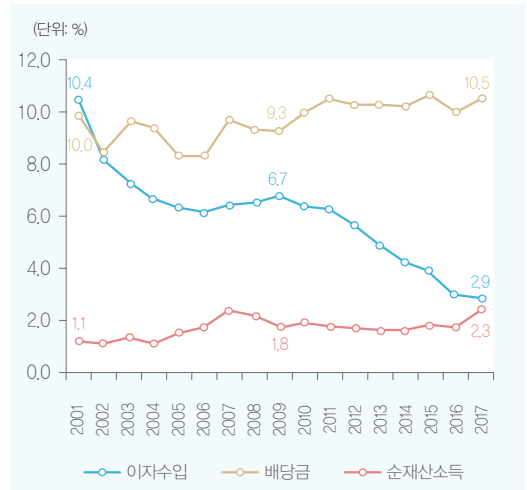
**2000년 이후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차입비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주거비 상승으로 임차 가구의 자가전환 등 주택매입 수요 증가, 가계의 자산 운용행태 변화로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 증가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 2001~2017년 기간 중 기준금리를 정하는 지표인 국고채(3년)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가 꾸준히 하락 (단,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은 증가)
- 금융자산 중 이자소득이 없는 주식의 비중이 높아져 이자수입은 감소하고 배당소득은 증가
  - 가계의 GNI에서 이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0.4%에서 2017년 2.9%로 감소한 반면, 배당금의 비중은 동기간 1.1%에서 2.3%로 증가

[그림 13] 국고채(3년)금리 및 주택담보대출(신규) 금리



[그림 14] 이자소득, 배당금 및 순재산소득 비중 추이



주: 이자소득, 배당금 및 순재산소득의 비중은 가계의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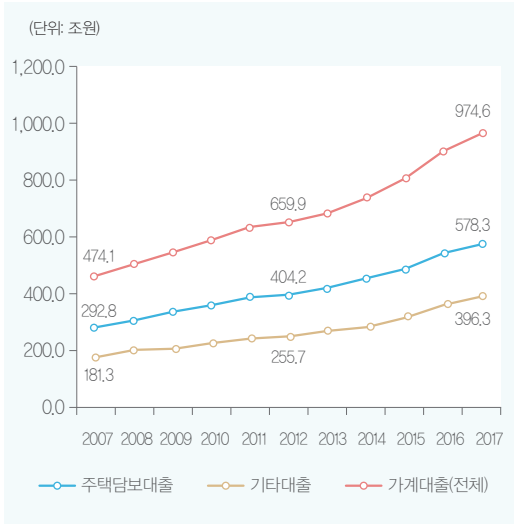
■ 주택대출<sup>10)</sup> 등에 따라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자지출 증가

- 2000~2016년 기간의 주택거래량<sup>11)</sup>은 2000년 102.0만건에서 2016년 197.9만건으로 연평균 4.2% 증가, 주택거래량은 2005년 119.6만건에서 2016년 155.5만건으로 연평균 2.4% 증가
- 특히 건축물 거래건수는 2009년 24.6만건에서 2016년 42.4만건으로 연평균 8.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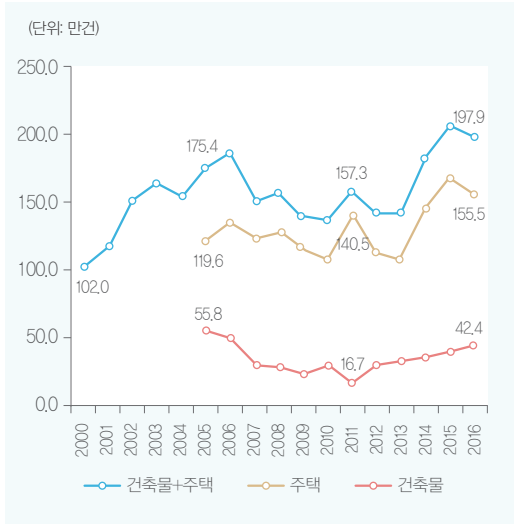
10) 주택담보대출은 2017년 기준 가계부채의 54% 수준

11) 공식적인 주택거래건수 통계가 2006년부터 존재, 2000년부터의 주택거래건수 파악을 위해 취득세 납부건수를 통해 거래량 파악

[그림 15] 대출종류별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



[그림 16] 주택거래량



주: 가계대출은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만의 가계대출액으로 보험, 여신전문기관 등의 가계대출은 제외  
 자료: 한국은행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4) 가계소득 구성항목의 OECD 국가와의 비교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 비해 가계·기업소득 간 성장격차가 크게 나타난 원인은 우리나라 가계에서 자영업의 영업잉여와 이자수입의 비중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기 때문

- 자영업자의 비중이 OECD 국가 평균(2016년 14.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우리나라(2016년 21.2%)의 특성상, 자영업 영업잉여의 부진은 가계소득 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
  - 2000~2016년 기간 중 자영업 영업잉여 연평균 증가율과 GNI 연평균 증가율과의 차이는 -4.8%p(GNI 6.2%, 영업잉여 1.4%)로 OECD 국가 평균 -0.8%p(GNI 3.8%, 영업잉여 3.0%)에 비해 큼
  - 2000~2016년 기간 중 자영업 영업잉여의 GNI 대비 비중의 변화 폭도 우리나라(-8.4%p)가 OECD 국가 평균(-1.5%p)에 비해 크게 나타남

- 순재산소득의 GNI 대비 비중은 순이자소득 비중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의 비중 상승으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감소폭이 작음
  - 순이자소득의 GNI 대비 비중은 이자수입의 비중 하락폭 확대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4.4%p 감소폭이 큼 (2000~2016년 기간 중 우리나라는 가계의 이자지출은 OECD 국가 평균과 같은 속도로 감소하였으나, 이자수입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3.4%p 크게 감소)
  - 배당소득의 GNI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0.2%p 크게 증가

[표 8]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가계의 소득구성 항목의 GNI 대비 비중 비교

(단위: %, %p)

	한국			OECD 평균			차이 (A-B)
	2000	2016	차이(A)	2000	2016	차이(B)	
가계소득	67.9	62.0	-5.9	68.5	66.1	-2.4	-3.5
(+)임금 및 급여	36.9	38.2	1.3	38.0	38.1	0.1	1.2
(+)자영업 영업잉여 <sup>1)</sup>	16.0	7.6	-8.4	15.7	14.2	-1.5	-6.9
(+)순재산소득	7.2	6.3	-0.9	6.7	5.2	-1.5	0.6
(+순이자소득	3.2	-0.3	-3.5	1.3	0.4	0.9	-4.4
(+이자수입	7.2	2.2	-5.0	3.5	1.1	-2.4	-3.4
(-)이자지출	4.0	2.5	-1.5	2.2	0.7	-1.5	0.0
(+배당소득 <sup>2)</sup>	0.6	1.4	0.8	1.8	2.4	0.6	0.2

주: 1)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자영업 영업잉여에 대한 통계는 2010년부터 제공되고 있어, 한국은행의 국민계정통계(고정자본소모 미포함)의 자료를 이용. 단, OECD 자영업 영업잉여 통계는 영업잉여에 고정자본소모를 포함한 총계념으로 공표

2) 본 분석에서 대상으로 한 25개국 중 배당금 통계가 있는 18개국을 대상으로 함

자료: OECD 및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04. 시사점

1995년 이후 OECD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성장률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격차가 큰 상황

- 우리나라 가계에서 자영업의 영업잉여와 순이자소득 비중 하락폭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기 때문

## 가계의 소득증가를 둔화는 가계의 소비여력 저하로 내수 부진과 기업의 투자 부진, 저축률 저하, 가계부채 문제 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 가능

- 가계와 기업부문의 소득에 성장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가계소득의 저성장 개선을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경쟁력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세제, 금융, 사회적 기반 구축 등의 정책지원 검토 필요
- 특히, 전통적 자영업 영역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생존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의 영업이익률과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전략과 과당경쟁 문제 해결 등 정책적 노력을 강구할 필요



**nabo** Economic Trends & Issues

# 경제동향 & 이슈

2018년 5월호 통권 제67호

---

**발행일** 2018년 5월 21일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

© 국회예산정책처, 2018



건전한 재정  
행복한 미래

naboo Economic Trends & Issues  
경제동향 & 이슈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6-001572-06